

INSS

2024년 정세 평가 및
2025년 전망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2024년 정세 평가 및
2025년 전망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북한 정세

2024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5년 전망 • 5

I. 2024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5년 전망	7
1. 개요	7
2. 2024년 북한 정세 평가	9
3. 2025년 북한 정세 전망	33

지역 정세

2024년 지역 정세 평가 및 2025년 전망 • 45

II. 2024년 지역 정세 평가 및 2025년 전망	47
1. 2024년 지역 정세 평가	47
2. 2025년 지역 정세 전망	58

안보 정세

2024년 안보 정세 평가 및 2025년 전망 • 77

III. 2024년 안보 정세 평가 및 2025년 전망	79
1. 국제 안보환경 및 한반도 주변 정세	79
2. 국제 군사안보 정세	84

2024년 신안보 정세 평가 및 2025년 전망 • 95

IV. 2024년 신안보 정세 평가 및 2025년 전망	97
1. 경제안보	97
2. 신기술·AI	100
3. 사이버안보	104
4. 우주안보	107
5. 바이오·보건안보	109
6. 테러	113
7. 국제범죄	117
8. 기후변화	120

본 자료집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소속된 해당 전문가들의
분야별 평가 및 전망을 종합한 것임

2024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5년 전망



I. 2024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5년 전망

1. 개요

- **정치 분야**에서는 선대 지도자들의 신적 이미지와 역사를 최대한 삭제하고, 김정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독려하며 김정은의 단독 우상화 수립을 위한 세뇌화 작업 가속화
 - 올해 10월부터 ‘주체’ 연호 사용 중단, 최근 해외 파견 근무자들에게 선대들의 문헌 대신 김정은의 영도사 학습 강요
 - 내년 광복절 80돌, 당 창건 80돌 계기 김정은 개인숭배와 신격화, 우상화를 전례 없는 규모로 추진하는 동시에 반체제적 행위들에 대한 집중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

- **군사 분야**는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방공업 강화 방침’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활용해 핵무기 등 비대칭 WMD 전력 강화에 중점
 - 김정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ICBM과 각종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고 고강도 실전 대비 훈련을 전개하며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안보환경을 위협
 - 올해 김정은이 한반도 전쟁 시 핵무력을 우선하는 ‘선택형 전쟁지도 체계’를 구축한 데 따라 내년에도 전술핵 미사일 제조 및 실전 배치 본격화와 당 창건 80돌 계기 전례 없는 대규모 열병식 개최 예상

- **경제 분야**는 핵무기 증산과 주요 군수산업 대상들, 전시성 건설 사업에

대한 편중 투자 등으로 만성적 경제난이 지속되며 지난해부터 추진한 일련의 경제관리 개선정책도 실패에 직면

- 올해에도 대러 대규모 무기 수출과 국제사회에서의 온갖 불법 수익 등으로 상당한 재원을 확보해 군수산업 현대화와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
- 지방발전 20×10 정책, 평양시와 지방의 주택 건설, 수해 지역 피해복구 건설 등金正은의 전시성 건설 사업에 재원을 일부 투입하면서 내년 당 창건 80돌 계기 각 부문의 실질적 성과 창출 압박

○ **사회 분야**는 각종 악법을 적용하여 강력한 단속·통제를 지속하나, 민심 이탈 차단에 한계

- 올해 상반기 전국의 경찰 말단 간부들을 평양에 집결시키는 등 반체제 행위에 대한 감시·통제 수위를 한층 제고하였으나 단속에 차질
- 내년에도 대남 적개심을 활용해 청년 세대의 충성심을 독려하는 등 체제 안전성 확보에 부심할 것으로 전망

○ **대남 분야**는 올해 초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金正은의 대남 방침을 정당화하는 차원의 법제화 및 내부 메커니즘 정리와 함께 대남 심리전을 지속하며 각종 물리적 대남 도발도 강행

- 올해 오물 풍선 살포, 남북 접경지대에 대한 대남 확장기 소음공해방송, GPS 전파교란, ‘대통령 탄핵’에 중점을 둔 반정부 심리전 등을 지속 추진
- 내년에도 정찰위성 발사 등 각종 발사체 시험발사를 명분으로 대남 군사적 도발 지속, 우리 주요 기관과 시설에 대한 사이버 도발 확대 예상

○ **대외 분야**는 러시아에 대한 최우선 전략을 추구하면서도 중국 지도부와 현재 수준에서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은 유지하며 중북 관계 관리

- 대미 관계에서는 트럼프 당선과 무관하게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과 대

북 적대시 정책 철회의 전략적 기초 유지, 트럼프의 전략적 ‘결단’에만 유연하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

- 중북 관계는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광복 80돌과 당 창건 80돌 계기로 중국 당 및 국가의 고위급 대표단의 방북 등 상호 고위급 접촉과 대화 전망
- 러북 관계에서는 올해 ‘러북 신조약’과 북한군 파병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올해의 협력에 기반해 러북 간 외교·경제·과학기술 등 전반적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
 - ※ 내년 5월 러시아의 전승절 전후 김정은의 방러 예상, 아울러 러북 군 당국 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특수군의 대대급 병력을 러시아 전승(80돌) 열병식에 등장하게 하는 방안 추진 가능

2. 2024년 북한 정세 평가

1) 정치 분야

가. 특징

□ 대외전략 전환을 통한 정치 리더십 보완

- 김정은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대남 전략을 전환하고 후속 조치 시행
 - 김정은이 2023년 12월 말 개최한 당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대남전략 전환을 천명
 - 북한은 기존 노선을 변경해 남북한 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선언, ‘적대’에 중점을 두며 북한의 대외정세를 북한에 유리하게 바꾸려는 현상변경적 의도로 대남전략을 공세적으로 전환
 - 김정은이 ‘통일’, ‘화해’, ‘동족’ 개념 삭제를 지시하며 관련 후속 조치 시행
 - ※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철거, 평양 지하철 ‘통일역’ 명칭 변경, 통일 관련 대남 기구 개편 및 폐지 등 북한 전역에서 ‘민족’과 ‘통일’을 지우는 작업을 시행, 남북

연결 도로인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하고 지뢰매설, 방벽을 설치하는 등 요새화 작업을 통해 물리적 차단을 시도

- 올해 6월 러시아와 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어 러북 관계 밀착 심화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19일 24년 만에 방북해 북한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 1961년 ‘조소 조약’ 수준의 자동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되며 군사동맹 부활
 - 러시아는 ‘러-우 전쟁’ 장기화로 인한 부족한 탄약과 군수물자, 병력 공급처가 필요, 북한은 핵·전략무기 고도화 기술 획득과 경제적 지원 등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하며 러북 밀착 심화
 - 김정은은 러시아와 관계 격상으로 대중 의존도 감소, 외교적 고립 타개, 대미 협상력 제고 등에 적극 활용
-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의 대남전략 전환과 러시아와의 ‘신조약’ 체결은 김정은의 정치적 리더십 강화로 귀결

□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자신감 확보

- 김정은은 올해에도 핵·전략무기 고도화를 통해 군사 분야의 리더십 강화
 - 김정은이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2022년 ‘핵무력정책 법제화’, 2023년 ‘핵무력 정책 헌법화’를 통해 핵무력 사용을 제도화하고 핵 선제 타격을 명시
 - 올해에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 남한을 타겟으로 한 초대형 방사포, 전술핵무기 개발 가속화, ‘화성-19형’ 등 ICBM 시험발사에 성공하며 대남·대미 핵위협 능력제고
- 핵무력 고도화를 대내·대외적으로 과시하며 자신감 확보
 - 정권수립일(9.9절) 계기 김정은은 ‘위대한 우리 국가의 융성변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 제목으로 연설하며 핵무력 강화 의지를 피력하고 핵보유

국 지위를 강조하며 군사적 위협 제고

※ 김정은, “핵무기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데 대한 핵무력 건설정책을 드팀없이 관철해나가고 있다. 우리 국가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 공화국의 핵전투 무력은 철통같은 지휘 통제 체계 안에서 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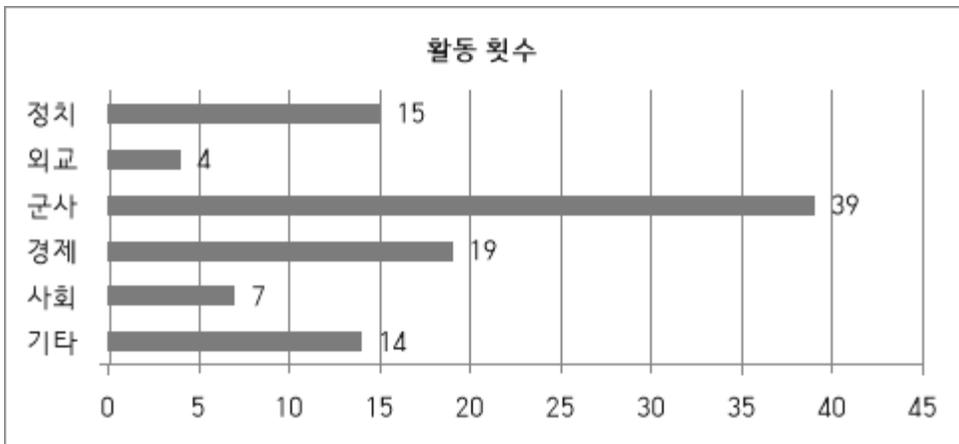
- 김정은이 9월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시설을 현지 시찰, 최초 공개로 내부결속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 과시

□ 대외전략 전환과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자신감 발현

- 김정은은 선대 수령의 이상화·신격화를 약화시키고 자신만의 고유한 독자적 리더십 강조
 -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일정책 ‘조국통일 3대헌장’ 유훈을 부정하며 선대 업적 지우기뿐만 아니라, 김일성 생일 ‘태양절’을 ‘4.15절’ 또는 ‘4월의 명절’로 축소하며 김일성 이상화·신격화 약화
 - 반면, 당 중앙간부학교 혁명사적관 외벽에 김정은 초상화를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와 나란히 걸며 선대 수령과 대등한 위상을 확보
 - 당 공식행사에서 간부들에게 김정은 단독배지(초상휘장)를 착용케 하며 김정은 이상화를 본격적으로 시도
- 김정은은 2024년 7월 말 중북 접경지역 홍수 피해를 현지 시찰하며 ‘이민 위천’, ‘광폭정치’를 연출
 - 7월 말 평안북도와 자강도 등 압록강 인근에 60년 만의 최대 폭우로 압록강이 범람하면서 살림집과 농경지, 건물, 도로 등이 침수하는 피해가 발생
 - 김정은은 구명보트를 타고 수해 지역 시찰, 당 중앙위 정치국 비상회의를 개최해 주민 구조와 대책을 지시하고 관련 책임자 엄벌을 지시하는 등 ‘광폭정치’ 행보
- 2024년 김정은은 군사, 경제 분야에서 공개 활동 증가
 -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2023년에 비해 소폭 증

- 가, 특히 군사 분야와 경제 분야의 현지 지도, 공개 활동 횟수 증가
- 군사 분야에서는 각종 훈련을 참관하고, 전술핵 고도화를 직접 현지 지도 하며 공개 활동 증가
 - 경제 분야에서는 1월 새 지방공업 발전 전략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채택하고 각지의 지방공업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하면서 공개 활동 현저히 증가

〈그림 1〉 2024년(1-10월) 김정은 분야별 공개 활동 현황



※ 김정은의 공개 활동을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기타 분야로 분류, △정치는 당, 최고인민회의 주요 회의 및 연설 △경제는 공장, 기업소, 건설 현장 △군사는 군부대와 군수공장, 무기시험 참관 △사회는 민생 관련 △기타는 참배, 공연관람 등

나. 평가

□ 대외관계 변화를 통한 활로 모색

- 북한은 대외관계의 변화를 통해 위축되었던 대내 정세의 활로 모색
 - 김정은은 코로나19, 대북 제재, 자연재해 등 3중고로 인해 위축된 대내 정세를 남북관계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전환과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으로 전환하며 해법 모색

- 대외관계 전환을 체제 내부 역량 강화로 연결
 - 대내적으로 핵능력 고도화 이외에 구체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 사회에 전체에 '자력갱생'만을 촉구
 - 남북 '적대' 관계와 러북 '동맹' 관계 설정을 통해 체제 내부 역량 강화와 내부 결속을 모색하고 김정은의 대내 정치적 리더십으로 연결 시도

□ 자신감만 가득한 빈약한 내실

- 김정은은 핵무력 고도화와 대외관계 개선으로 자신감이 충만하나 체제 내 실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 김정은이 자신감을 기반으로 선대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책과 유훈을 뒤집고 신격화 약화, 반면 자신의 우상화와 신격화 시도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지방발전 20×10 정책' 관련 공장 건설 등 여전히 보여주기식 '건설정치'에 주력
 - 호화 SUV를 타고 수해 현장을 방문하고, 초호화 요트로 휴가를 즐기는 김정은의 자신감이 실제 체제 내실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2) 군사 분야

가. 특징

□ 김정은의 군수생산 부문 집중 및 중복 방문

- 김정은은 올해 4월 '국방공업기업소'를 신설해 안정적 대러 무기지원 생산 차원에서 군수기구를 개편하고, 군수생산 부문 공개 활동에 집중
 - 무장장비 생산 실태를 점검하고 정밀 군수품과 주요 저격무기와 방사포 생산 등 중요 국방공업기업소 현지 시찰 집중
-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6.19) 이후에는 대규모 홍수 피해에도 불구하고 군수생산 관련 중복 방문 활동에 집중
 - 7월과 8월 국방공업기업소 재차 방문과 240mm 방사포와 600mm 방사포차

성능시험 지도, 연이은 포병학교의 훈련지도 및 특수부대 훈련기지 중복 방문

□ 다탄두 기술 및 대형급 ICBM 개발 등 미사일 능력 고도화 지속

- 지난해 말 고체연료에 기반한 화성-18형 ICBM 시험에 이어 올해 6월 미사일 총국은 “개별기동 전투부 분리 및 유도조종시험” 등을 주장하고 다탄두 기술을 시험
- 10월에는 신형 혹은 개량으로 추정되는 ‘화성-19형’ ICBM 시험발사 단행
 - 기존 ‘화성-18형’에 비해 탄두부 크기를 비롯하여 추력, 비행시간이 증가하고 ‘화성-19형’을 ‘최종 완결판’으로 주장
 - ※ ‘화성-19형’은 최대 정점고도 7687.5km, 5156초 간 1001.2km를 비행
- 특히 과거 ICBM 화성-17형, ICBM 화성-18형이 사전에 외형을 공개한 후 시험 발사하는 방식인데 반해 ICBM 화성-19형은 사전 공개 없이 시험 발사

□ 전술핵 및 재래식 무기체계 동시 개발 지속

- 전술핵체계에 초대형 방사포를 포함한 훈련 실시와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탄두 장착 신형전술탄도미사일, 개량형 전략순항미사일 등의 성능향상을 위한 시험 진행
 - 올해 초 극초음속 미사일(화성포-16나) 개량 시험과 4.5톤 초대형 탄두 장착 신형전술미사일 <화성포-11다-4.5> 개량 시험(9월),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가상종합훈련(4월), 개량형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진행
 - 8월 신형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의 전방부대 배치 인수인계식을 거행하면서 전술핵 역량 조기 구비를 강조
- 김정은은 올해 생산한 저격용 소총 직접 사격(5월), 방사포 차량 직접 운전, 지상과 수중을 포함한 각종 자폭무인기를 개발 생산하여 조기 실전

배치를 지시

□ 무기급 우라늄 생산 시설 최초 공개와 비밀 ICBM 기지 시찰

- 김정은은 정권수립일 연설에서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강조한 직후 ‘핵물질연구소’를 방문(9.13), 비공개 무기급우라늄 생산시설을 최초 공개
 - 비밀 ICBM 기지를 시찰(10.3)하고 “핵무력 대응태세” 유지를 강조하는 등 미 대선에 앞서 핵 위협 행보를 통해 존재감 과시

□ 러북 간 군사교류 및 협력 확대

- 러-우 전쟁 이래 지속되어 온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이 러북 정상회담 및 러북 간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어느 때보다도 군사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진행
 - 7월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금철 총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군 군사교육일군 대표단의 방러 이후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러시아 국방성 부상이 인솔하는 군사대표단도 방북(7.19)
 - 러시아에서 개최한 국제군사기술포럼 ‘군 2024’(8월)에 미사일 개발 핵심인사인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이 참석
 - 9월 러시아연방 안전이사회 서기장 세르게이 쇼이구 전 국방장관이 김정인과 접견한 후 10월 8일 북한군 특수부대의 러시아 파병 시작

□ 북한 특수부대 러시아 파병

-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북한군의 파병 가능성이 6월 러북 정상회담 이후 꾸준히 제기
 - 한국은 “북한이 지난 10월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의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는 증거자료와 함께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

나. 평가

□ 전쟁 준비 강조를 통한 북한군 전력 향상에 중점

- 김정은은 올해를 ‘전쟁준비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로 선언, 기존 전략무기 및 미사일 발사 훈련을 넘어 재래식 무기 및 전투력 향상을 위한 훈련까지 범위를 확대해 어느 때 보다도 전쟁준비를 강조
 - 핵전력 기반 군사훈련 실시, 전술핵 사용 체계 확대, 지역 맞춤형 재래식 전력 증대, 파병을 통한 실전 경험 획득에 중점
 - 4월과 5월, 북한군 포사격 훈련을 지도하면서 “적의 수도를 타격권 안에 두고”, “포병전쟁의 준비 완성”, “서울타격임무” 등 대남 호전적 발언을 남발
 - 10년 만에 개최된 북한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 대회(11.14~15)에서 핵무력 강화 지속과 모든 무력 활동을 ‘전쟁준비’ 완성을 위해 매진할 것을 특별히 강조

□ 대러 무기 지원 및 파병 준비에 만전

- 대러 무기 지원을 위한 군수조직 개편 등 군수 생산능력 증대에 주력하면서 하반기 대러 파병 준비에 집중
 - 상반기 김정은의 군수생산 부문에 집중된 군 공개 활동에 이어 7월 대규모 홍수 피해 이후에도 군수 부문 중복 시찰 활동을 통해 차질 없는 대러 무기 지원 및 파병 준비에 주력
 - 대러 무기 지원과 파병에 집중한 결과, 북한군 관련 주요 행사인 군 창설일을 비롯하여 정전협정일, 정권수립일, 당 창건일에 열병식 등 군 관련 행사 없이 조출히 진행

□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재래식 무기체계 동시 개발에 주력

- 올해 11월까지 총 17회의 핵·미사일과 재래식 무기체계의 성능향상을 위한 시험 발사에 주력
 - 수중과 지상의 전략·전술 순항미사일을 비롯, ICBM, 극초음속 미사일, 단거리전술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성능 개량을 위한 시험 발사를 지속하고 신형 ICBM 발사대 차량, 핵잠수함 건조 등을 진행
 - 특히 ICBM-19형 시험(10.31)은 △미 대선에 임박해 과거 ICBM 시험과 달리 사전 공개 없이 실시했다는 점 △다탄두 탑재 가능성 등 북한의 핵무력 지속 증강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도발로 평가
 - ※ ICBM-19형 시험을 ‘최종 완결판’으로 주장, 2017년 11월 ICBM 화성-15형 시험을 ‘국가 핵무력 완성’으로 선언하고 대미 대화 기조로 전환한 때를 연상

□ 미 대선을 겨냥한 7차 핵실험 실시 및 대남 도발 위협

- 최초로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 공개(9.13), 비밀 ICBM 기지(10.23)시찰은 대미 핵·미사일 위협 능력 및 핵보유국 인정을 강요하는 차원을 넘어 핵실험 실시의 예고로 평가
 -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18형 기지 공개, 신형 ICBM-19형 발사 시험, 핵물질 생산기지의 공개 다음 위협 수준은 7차 핵실험 실시 위협으로 전개
- ‘적대적 두 국가’ 주장 이후 서해 NLL 일대와 군사분계선 등 새로운 국경선을 무력행사로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 지대함미사일 개발 등 재래식 전력 개발에 박차
 - 한미의 미사일 방공망 회피기술, 잠수함순항미사일, 지대함미사일, 서부지구 작전훈련과 포사격 훈련, 항공육전병 훈련, 각종 방사포 및 근거리 발사 훈련, 대러 파병을 통한 실전경험 획득을 추진
- 불법적이며 반인도적인 대러 파병 강행
 - 대러 파병 행위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로, 러-

- 우 전쟁 참전은 3차 세계대전을 부추기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평가
- 북한의 파병 의도는 △대러 지원을 통한 국제적 고립 탈피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국방 및 경제지원 획득 △실전 경험을 통한 전투력 향상 기도

3) 경제 분야

가. 특징

□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에 올인

- 올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 채택
 - 10년 간 매년 20개 지방 시·군에 경공업 공장을 건설, 식량 이외 필수 소비재 공급망을 완성한다는 계획
 - ※ 현재 북한에는 206개 지방행정단위(시·군) 존재
 - 식량의 경우, 2021년 12월 생산량·수매량 증가를 골자로 하는 ‘새 농촌 강령’을 발표
 - 즉 식량(‘새 농촌강령’) 및 소비재(‘20×10 정책’) 증산 및 공급확대를 통해 지방의 생활향상 및 도농격차 해소, 나아가 생필품 수입대체 목적
- 올해 8월 31일, 김정은이 참석한 지방발전사업협의회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의 확장을 결정
 - 각 시·군 경공업 공장 건설과 함께 보건시설, 과학기술보급기지, 양곡관리시설비 건설을 병행
- 8월 말 현재 90% 달성, 올해 지방공장 건설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 (김정은 9.9절 연설)

□ 국영 유통망 복원을 어느 정도 마무리

- 2020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무역 및 국내 식량·소비재·생산재 유통에서

시장을 억제하고 ‘사회주의 유통망’ 복원을 추진

- 추진 초기 공급 부족으로 시장물가 폭등 등의 현상이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공급난이 완화되면서 안정화되는 추세
 - 대러 군수물자 수출 대가로 식량, 자재 등을 들여와 국영 공급망을 통해 방출하는 것으로 추정
 - 시장물가 폭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에 전반적 공급 불안으로 보기는 곤란 (후술)

나. 평가

□ 경제실적은 대체로 작년 수준 유지

- 북한 경제는 대북 제재 및 팬데믹 여파로 사실상 7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2023년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
 - -3.5%(2017) → -4.1%(2018) → 0.4%(2019) → -4.5%(2020) → -0.1%(2021) → -0.2%(2022) → 3.1%(2023) (한국은행)
 - 발전 부문(-4.7%)을 제외하면, 농림·어업(1%), 광업(2.6%), 제조업(5.9%), 건설업(8.2%) 등 주요 부문 모두 플러스 성장
 - 중화학 공업이 2022년 -9.5%에서 2023년 8.1%로 급성장한 것이 특이, 대러 군수품 하청생산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
- 올해 생산 및 무역 모두 2023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김정은은 올해 생산계획 수행, ‘12개 고지’ 점령 전망을 대체적으로 낙관적으로 평가 (김정은 9.9절 연설)
 - 7월 홍수 피해가 있었으나 올해 작황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
 - ※ 2023년과 같거나 오히려 소폭 증산 예상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체 평가)
 - 다만, 여타 부문 수해복구에 노동력과 자재가 투입되고 있어 생산계획 달

성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 불가

※ 특히 군수공장이 집중된 자강도에 수해가 집중돼 무기 및 관련 중화학 공업 생산이 감소할 가능성 (한국개발연구원 자체 평가)

- 무역 역시 9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

※ 4월까지의 전년 동기 대비 수입이 감소했으나 이후 증가

□ 시장 환율 및 물가 폭등세가 경제적 불안정으로 이어질지 추가 관찰 필요

○ 올해 시장 환율과 물가가 가파른 폭등세 시현

- 달러 환율의 경우, 1월 초 대비 10월 말 현재 93.6%가 상승했으며 위안화 환율도 60.5% 상승

- 물가의 경우에도 품목별로 30.9%~83.7%가 상승

- 특히 환율의 경우, 불과 10개월 만에 약 2배로 상승하는 폭등세는 2009년 말 화폐개혁 이후 처음 나타나는 현상

〈표 1〉 환율 변동 추이

(단위: 북한원, %)

기준일	달러환율 (1달러)	위안화 환율 (1위안)	쌀 (1kg)	옥수수 (1kg)	돼지고기 (1kg)	휘발유 (1kg)	경유 (1kg)
24.1.7	8,317	1,257	4,943	2,343	14,967	12,733	11,333
24.10.27	16,100	2,017	7,250	3,067	27,500	18,500	17,067
증가율(%)	93.6	60.5	46.7	30.9	83.7	45.3	50.6

자료: 데일리NK

○ 환율의 경우 수입 증가에 따른 외화 수요 증가와 관련이 있으나, 대내 외화통제정책과도 연관

- 코로나 국경봉쇄 해제 이후 그간 지연된 수입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화 수요도 증가

- 대북 제재에 따른 외화 보유고 지속 감소를 감안할 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외화 환율이 급등
- 이와 함께 국내 외화 사용 금지 및 재정흡수조치에 따라 민간 외화가 희소해지면서 시장 환율이 추가 상승
- 물가의 경우, 환율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러북 경제협력 및 작년 추곡량 증가 등을 감안하면 특이한 현상
 - 환율 상승에 따라 수입품인 휘발유, 경유, 수입 식량의 시장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만, 러시아의 정제유·식량 지원을 감안하면 가격상승에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
 - ※ 특히 식량은 2023년 추곡상황이 좋아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
 - 두 가지 가능한 해석
 - ⇒ ① 대러 군수물자 판매 대가를 현금이나 기술, 자재로 받아 정제유, 식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가능성
 - ⇒ ② 전략물자인 식량과 정제유에 대한 당국의 통제가 강화되어 시장유통 물량이 오히려 감소했을 가능성
- 식량 유통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감한 점, 수입을 당국이 통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환율 및 물가 폭등이 경제적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
 - 2023년 이후 곡물의 대부분은 식량공급소(배급 계층) 및 양곡판매소(기타 계층)에서 거래되고 있어 시장가격 폭등이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 존재
 - 물론, 양곡판매소 가격은 시장가격에 연동되어 있으나, 북한 당국은 2023년 임금을 약 10배 인상했기 때문에 공급만 충분하면 대규모 식량난은 억제 가능
 - 현재 수입(import)은 당국이 독점하고 있어 시장 환율상승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 다만, '지방발전 20×10 정책' 관련 수입은 민간 수입을 허용하고 있어 환

올폭등에 따라 관련 수입이 계획보다 적게 이루어질 소지

4) 사회 분야

가. 특징

□ 민심 이탈 및 사상오염 차단에 총력

- 7월 중국, 러시아 등 해외 유학생을 소환하여 평양 인민대학습당 등에서 김정은 체제와 관련한 사상교육 등 ‘정치 강습’ 시행
- 김정은은 올해 여름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 주민을 평양에 초청해 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수해 책임 간부를 무더기 처형
- 한국 드라마를 유포한 중학생에게 12년형을 구형하는 등 청년 세대의 ‘사상오염’을 강력 단속하고, 남한풍이나 한류문화의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
 - 오물풍선 도발은 남한의 대북 화성기와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 심리전 차단에 주력

□ 민심 이탈 차단책 한계 노출

- 탈북 시도 병사 사살 등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지속 발생
 - 당, 군, 행정기관 내 뇌물 등 부조리 성행에도 불구하고 단속 차질
- 생활난으로 인한 식료품 도둑 등 질서 이탈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민생 회복에 대한 기대 난망

□ 김정은의 ‘애민’ 선전

- 올해 들어 141개 시군 내 농촌 살림집 1,600세대 건설, 화성지구 개발 등 지방발전 및 ‘새집 건설’ 실패를 집중 선전

- 김정은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시설 현대화 방침을 하달하는 등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 공개

□ 러시아 파병 사실 유출 차단 대책 부심

- 북한 관영매체는 파병 사실을 비보도
 - 파병 가족을 집단 이주시켜 철저히 격리하며 파병 사실을 은폐하는 한편, 파병 사실 유포자를 엄벌하는 등 확산 차단에 주력

□ 러북 간 교육·문화 분야 인적 교류 확대

- 러북 관계 밀착에 따라 7~9월에만 3,700여 명의 노동자 및 학생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으로 추산
- 11월 6일 최섉희 외무상은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와 관광 및 문화·스포츠 분야 협력 논의
 - 북한 선수단은 러시아 주관 국제체육회의 참석에 이어 러시아 현지 캠프 방문 및 훈련

□ 체제 단속 위한 전쟁 임박 분위기 조성

- ‘계급교양’을 통한 대남 적대 기조 강화
 - 노동신문 등 북한 주요 매체 속에서 ‘계급교양’의 적대 대상으로 그동안 ‘미제’와 ‘일제’가 주로 강조되었으나, 최근 남한을 집중 조명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미제’와 한국이 참여하는 대리전쟁으로 설명하고 남한에 대한 적개심 고조
 - 무인기 평양 상공 출현을 남한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전방 사격 준비태세를 하달하는 등 전쟁 임박 분위기 조성

□ 통일 지우기 작업 가속

- 김정은 지시에 따라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헌법 개정과 함께 통일, 한민족 등 관련 용어 사용을 전면 금지
 - 정의선 및 동해선 폭파 등 남북 화합 상징물 제거
- ‘조선 옷차림 풍속’ 등을 북한 단독 국가유산으로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록 추진하고, 말타기, 추어탕 조리법 등 한민족 고유의 생활 풍습 14개 분야를 ‘국가 미물질문화유산(무형문화재)’으로 규정

□ 김정은 단독 우상화 박차

- 올해 초 김일성, 김정일 선대를 지우면서 김정은의 단독 우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이를 노골화
 - 각종 공장, 학교 등 우상화 현판에 김일성, 김정일과 나란히 김정은의 현지 시찰 모습을 배치
- 김정은은 올해 광명성절(2.16), 태양절(4.15) 모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불참한 데에 이어 김일성 사망 애도기간도 종전의 일주일에서 하루로 단축
- 당 8기 10차 전원회의(6.29)에서 간부들이 김정은 단독배지를 착용하는 한편, 김일성 사망 30주기(7.8)에 맞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시 일부 간부들이 김일성, 김정일 배지 외에 김정은 배지를 단독 착용한 모습 노출
- 올해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11월 10일 현재까지 110회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 김정은의 활동상을 부각하며 백두혈통의 능력 있는 지도자로서 선전
 - 10월부터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하고, 해외에 파견된 인력들에게 선대의 문헌을 대신해 ‘김정은의 혁명역사’ 등을 강조

□ 김주애 대우 격상

- 김주애 노출빈도를 조절하면서 당 행사 등 활동범위를 점차 확대하며 급

- 격한 후계체제 구축 시 발생 가능한 주민들의 반감 유발 차단
- 김주애가 김여정의 안내를 받거나 최설희의 보좌를 받는 등 대우를 격상한 모습을 노출
 - 러시아 대사와 직접 담소하는 장면이나 김정은과 김주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공개하며 김정은 권위와 직접 연계되는 장면을 연출

□ 체제 단속에 여성 역할 강조

- 북한 젊은 세대들의 남한풍 및 자본주의 오염 방지에 어머니의 자녀교육이 중요하다는 김정은의 언급(2023.12) 이후,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분위기
- 2024년 6월 8일~7월 1일 진행된 당 8기 10차 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노동당 전문부서장에 김정순 여맹위원장을 임명, 산하 청년동맹이나 직업총연맹 등 젊은 세대에 대한 여성의 교육 역할 강화

□ 대규모 문화·예술행사 대신 스포츠 분야 활성화

- ‘아리랑 축전’ 등 대규모 집단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체제 우월성 및 견고성을 선전하던 과거와 달리, 문화·예술 분야 대규모 행사를 대폭 축소
- 주민 대상 ‘전국 공개 탁구대회’를 개최하고, ‘국제축구연맹(FIFA) U-17 여자월드컵’과 ‘세계청년권투선수권대회’ 우승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스포츠 붐을 조성

나. 평가

- 외부문화 유입에 대한 강력한 엄벌 등 사회통제정책과 ‘애민’ 등 유화정책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으나 주민 이탈 현상은 지속
- 전쟁 임박 분위기, 대남 적대 기조를 강화하며 위기감을 조성하는 한편, 김정은에 대한 단독 우상화 및 김주애에 대한 대우 격상을 통해 정권 공고화 노력

5) 대남 분야

가. 특징

□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가’ 관계로 규정

- 올해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의 통일전략노선을 배제하고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기구를 정리·개편
 -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말 당 전원회의에서 당 통일전선부와 대남기구를 정리·개편할 것을 지시하면서 “민족공조에 기초한 조국통일”이라는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을 전면 배제
 - 2021년 3월 김여정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구 폐지 가능성을 언급, 대남기구와 사업체계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다는 것을 예고
 - 지난해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통일전선부와 대남기구 정리·개편을 지시, 최고인민회의 14기 9차 회의에서 후속 조치 강조
-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백지화하고, 선전 및 교육 내용들을 삭제했으며 김정은식 ‘무력통일전략’을 공식화
 - 특히, 대한민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한민족’을 전제로 규정했던 대남기구 및 사업원칙과 방식을 폐기,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사소한 요인에 의해 전면전이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
 - 10월 7~8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4기 11차 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에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는 조항과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한다는 내용 반영
 - ※ 올해 1월 김정은이 지시한 헌법 개정과 관련, 북한은 10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고 이후 김여정의 도발 발언과 주요 언론을 통해 남북관계를 ‘적대적 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헌법 개정 동향을 공개

□ ‘적대국가’ 관계에 따른 고강도 대남도발

- 올해 1월 14일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십 차례의 미사일 도발과 초대형 방사포 발사,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 공개 등 연이은 대남도발 강행
 - 특히, 지난 10월 7일 국방종합대학 현지 시찰에서는 선대 통치자들의 ‘전통’과 ‘업적’을 무시하고 ‘적대적 두 국가’와 통일 외면 입장을 강조하면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전혀 없음을 강조
- 올해 5월 말부터 폐지, 비닐, 생필품 쓰레기 등 각종 오물풍선을 우리 지역에 보내기 시작해 현재까지 30여 차례에 6,000개의 풍선 도발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면서 남한 내 안보불안 확산에 집중
- 하반기에는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지역을 폭파해 긴장 수위를 고조시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후과’와 그에 따른 ‘안보 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
- 사이버 도발의 일환으로 육상과 공중에서 통신 마비·혼잡을 목표로 하는 GPS 전파교란 도발을 수백 여 차례 강행, 국민들의 불안·공포심을 반정부 분위기로 유도
- 평양 상공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하고, 김정은의 권위와 신변안전 ‘침해’ 요소에 대해서는 ‘추호’의 양보 없이 초강경 군사적 대응을 할 것임을 선포
 - 무인기 평양 상공 출현을 ‘주권침해행위’로 주장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켜 체제결속을 도모하는 동시에 ‘러북 신조약’ 시행을 위한 정치적 목적 추구에 활용

□ 남남갈등과 전쟁위기설 확산

- 대남공작기관들을 통해 한국 내 전쟁위기설을 확산시키고 남남갈등을 격화시키는데 총력 집중

- 올해 상반기 대남공작기관들은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4월 총선을 타겟으로 한 정치공세와 핵 전략자산의 '파괴력'을 우리 국민들 속에 유포시켜 안보위기를 조성하고 남남갈등을 조장
- 종북단체들을 활용하여 한미일 군사협력 균열과 윤 대통령 '퇴진'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추동하는 선전공세와 정치권 와해 공작을 전면 추진
- 통전부 개편으로 설립된 '대적사업국'은 문화교류국의 대남공작업무를 수행, 산하에 대남선전을 담당하는 연락소와 대남연구기관(조국통일연구원)을 두고 대남공작을 공세적으로 추진
- 대남공작 전문가 김영철을 고문으로, 통전부장이었던 리선권을 대적사업국 국장으로 임명해 '적대국가'인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고 있는 도로와 철도를 폭파하는 고강도 도발 강행

나. 평가

- 김일성·김정일 정권에서 형식적으로 유지, 김씨 일가의 '대남 업적'으로 선전해 왔던 '조국통일3대원칙'과 '민족공조론'의 허물을 완전히 벗고 김정은식 '무력통일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
- 올해 연초부터 북한 매체 통해 남북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두 개 국가'라는 주장을 지속, 주민들 속에 확산되고 있는 정권에 대한 불만과 동요를 대남 적개심 고취로 유도
- 올해 초부터 민족성을 배제한 적대국가론을 지속 주장하면서 각종 군사도발과 강도 높은 대남비난 발언들을 쏟아낸 것은 남한 내 진영간 갈등 고조, 현 정부 반대 투쟁 추동 목적의 대남전략 일환

6) 대외 분야

가. 특징

□ 김정은의 2024년 대외정책 원칙

- 2023년 당 8기 9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김정은이 정립한 2024년 대외정책 원칙
 - 첫째, “당의 존엄 사수, 국위 제고, 국익 수호의 원칙에서 강국의 지위에 맞는 공화국의 외교사를 써나가야 한다.”
 - ① (당의 존엄 사수) 김정은의 ‘대외적 권위’를 옹호하고 ‘애민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로서의 그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원칙
 - ② (국위 제고) 국가의 입지를 높이는 사업으로서 기본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원칙
 - ③ (국익 수호) 개별적인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관계, 경제외교를 전개하며 대북 인권 공세를 차단하는 원칙
 - 둘째, “사회주의 나라 집권당들과의 관계 발전에 주력”,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드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지지·연대 기반을 구축”, “국제적 규모에서 반제 공동행동, 공동투쟁 전개”
 - ① 중국, 베트남, 쿠바, 라오스 공산당, 인민혁명당 등 각국 집권당이 각국 정부에 긍정적인 대북정책 건의를 하도록 영향
 - ② 러시아, 중국, 이란, 시리아,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팔레스타인 등 미국과 서방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들과의 연대를 형성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대북 ‘핵·미사일 규탄 공세’, ‘인권개선 공세’에 공동으로 대응
 - ③ 전 세계 공산당, 노동당들과의 교류·협력, 민간급 친북단체들과의 긴밀한 연계 하 김정은의 ‘위대성’,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 서방의 대북 인권 공세의 ‘부당성’ 등에 관한 여론조성 활동을 전개

- 셋째,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미, 대적(한국) 투쟁 원칙 견지”, “고압적·공세적 초강경 정책 실시”, “전쟁 억제력의 압도적 행사(핵위협)로 안보 위기와 공포 조성”, “초강경 대응, 압도적 실력 행사로 제압”
 - ① 향후 미국과의 협상, 대화 등에서 유리한 입지 조성
 - ② 지속적인 핵·미사일 활동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자연스럽게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면역 형성’

□ 올해 대외정책 원칙

○ 사회주의 국가 관계

- 김정은이 중국, 베트남, 라오스 당 및 국가수반들과 축전 및 답전 교환
- 김성남 당 국제부장이 3월 중국, 라오스,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
- 박상길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9월 베트남, 라오스 등을 방문

○ 쿠바 관련 특이 행보

- 한국-쿠바 수교(2.14) 후 북한은 주쿠바 북한대사 소환, 김정은이 쿠바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답전 비공개, 쿠바 관련 기사 일체 비보도
- 반면, 쿠바는 라울 카스트로가 이례적으로 김일성 생일 계기 김정은에게 축전, 당보 ‘그란마’ 등에 북한 관련 기사 자주 보도, 쿠바 대통령이 소환되는 북한 대사를 이례적으로 접견
- 이후 북한은 8월 신임 대사를 쿠바에 파견하는 등 쿠바와의 관계를 ‘완전 냉각’까지는 끌고 가지 않으려는 의지 시현
- 그러나 쿠바 외교부 양자 총국장(차관급) 카를로스 페레이라가 6월 한국을 방문해 한국-쿠바 간 대사관 개설 등 관계 발전에 박차, 북한의 대쿠바 영향력의 한계 노정

○ 대러 관계

- 러시아와의 관계를 대외관계 제1순위에 놓고 러북 밀착을 심화

- 6월 김정은이 방북한 푸틴 대통령과 회담 후 양국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
- 방북한 러시아 국방성 차관을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만나주는 등 러북 밀착 과시, 최설희 외무상도 2회에 걸쳐 러시아를 방문하고 푸틴 접견
- 북한은 대러 무기 지원에 이어 군 병력까지 파견

○ 대중 관계

- 중국은 러북 밀착에 불편함을 표출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관계로 인해 적당한 선에서 관계 유지
- 시징핑과 김정은은 중북 수교일, 북한 정권수립일 등 계기에 장문의 축전과 답전을 교환하면서 친분을 과시
- 1월 중국 외교부 쑨웨이동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외교부 대표단, 4월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당 및 정부 대표단, 5월 단둥 기업가 대표단 등이 북한을 방문

○ 기타 ‘반제’국가 관계

-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팔레스타인 등에 대한 지지 입장을 집중적으로 표명
-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서방의 대북 인권 공세 차단 또는 방어를 목표로 ‘반제’국가들과 협력 유지

□ 대미·대일 관계

○ 대미 관계

- 김정은이 당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강대강’, ‘정면승부’, ‘초강경 대응, 압도적 실력행사로 제압’ 등의 원칙에 따라 미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 견지
- 8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무기체계’ 인수인계 기념식에서 미국은 “몇 년 동안 집권하고 물러나는 어느 한 행정부가 아니라 후손들도 대를 이어 상대하게 될 적대적 국가 실체”라고 미국을 맹비난

- 10월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미국의 그 어떤 행정부와도 핵무기에 관한 흥정을 하지 않을 것이며 미 행정부가 달라진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
- 10월 ‘국군의 날’ 행사에 B-1B의 한반도 출현, 무인기 평양시 ‘빠라살포 사건’ 등에 대해 미국의 책임론 주장
- 10월 말 미 대선 직전 ICBM ‘화성-19형’을 시험 발사하면서 미국을 압박

○ 대일 관계

- 올해 초부터 강온 전술로 일본의 관심을 유발, 1월 5일 김정은이 일본 이시카와현의 지진 피해와 관련해 미수교국인 일본 총리에게 이례적으로 격식을 갖춰 ‘위로전문’을 발송
- 2월 김여정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 총리의 방북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데 이어 3월에는 일본과 그 어떤 접촉과 교섭도 거부하겠다는 엇갈린 반응을 표출

□ 북한 인권 특이동향

- 11월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네 번째 보편적 정례검토(UPR) 심의에 참가한 북한 중앙재판소 국장은 사형이 원칙적으로는 지정된 장소에서 비밀리에 집행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 ‘공개처형’을 간접적으로 인정
- ‘간첩’, ‘사회주의에 불만을 품은 범죄자’들을 일반 범죄자들과 분리해 수용한다고 함으로써 ‘정치범 수용소’의 실체도 인정
- 이는 북한 대표단의 실수가 아니라 UPR에 일부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대북인권결의안’, 북한 인권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의 보고 등을 배격, 선정적 대북 인권 공세를 피하려는 의도

나. 평가

- 종합적으로 올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대외관계가 비교적 활성화된 해인 것으로 평가
 - 러북 밀착을 배경으로 벨라루스, 이란 등 친러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사회주의 국가 집권당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등 국제적 고립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 특히, 미 대선의 트럼프 승리, ‘납북자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일본의 끈질긴 대화 요구 등 북한에 유리한 정세 형성
 - 2024년 북한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불편했던 대중 관계는 러시아와의 관계 밀착이 절실한 북한이 중국을 잠시 뒷전에 둘 수밖에 없다는 전략적 계산에 의한 것으로 평가

3. 2025년 북한 정세 전망

1) 정치 분야

□ 15기 대의원 선거 시행

- 2025년 상반기에는 최고인민회의의 15기 대의원 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
 - 북한 헌법 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의 14기 대의원 임기가 끝나는 2024년에 15기 대의원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선거가 시행되지 않으며 15기 최고인민회의도 자연스럽게 미개최
 - ※ 북한 헌법 제90조에서 “최고인민회의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라고 규정
 - 15기 대의원 선거 지연 이유로는 대의원 후보 선정, 선거법 개정, 대규모 홍수 피해, 적대적 두 국가관계 반영에 방대한 시간 소요 등으로 추정

□ 헌법 개정 내용 공표

- 2025년에는 올해 개정된 헌법 내용을 공표하거나 추가적 헌법 개정이 이

뤄질 것으로 예상

- 올해 10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4기 1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했음을 시사했으나 구체적인 내용 미공개
-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반영해 ‘민족’과 ‘통일’ 용어를 삭제하거나 ‘영토’ 관련 조항을 신설한 헌법 개정 내용을 부분적으로라도 공개할 것으로 예상
- 영토 조항과 같이 일부 민감한 내용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충돌, 우려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며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개정할 가능성 예상

□ 당 창건 80주년 행사

-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할 것으로 예상
 - 2025년은 당 창건 80년을 맞는 해이고 북한이 중시하는 정주년으로, 당 창건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해 대내외에 체제 안정성을 과시
 - 김정은이 2024년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 담화에서 성공적인 축전 개최 준비를 당부

□ 8차 당대회 성과 결속 및 9차 당대회 준비

- 8차 당대회 과업과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완수 압박
 - 2021년 1월 당 8차 당대회의 전략노선으로 ‘사회주의 경제발전 총력집중 노선’을 이어가며 주요 과업으로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을 선언
 - 이미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으로 제시했던 주요 과업¹⁾을 훌륭히 완결 중이라고 자평, 성과 달성에 대한 대대적 선전이 예

1) △극초음속활공비행체, △고체연료형 IBCM, △초대형 핵탄두, △15,000km 내 전략적 대상에 대한 명중률 제고, △핵추진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 △무인정찰기 등이 해당

상되고, 내년에 미완성 과업에 집중 예상

- 8차 당대회 과업의 핵심인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 마무리를 통해 체제결속을 극대화하며 2026년 당 9차 당대회의 성공적 개최 분위기 조성

2) 군사 분야

□ 내년 상반기 7차 핵실험 실시 위협 고조

- 내년 미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7차 핵실험 실시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
 - 미 신정부와 협상과 대결의 기로에서 핵무력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공세적인 핵실험 실시 위협을 제기할 가능성
 - 이미 신형 ICBM-19형 발사, 무기급 우라늄 생산기지 공개, 비밀 ICBM 기지 공개 이외 남아있는 위협 수단은 핵실험 실시나 대남 무력 도발 정도
 - 대남 전술핵 공격 능력을 실증하기 위해 기공개한 전술핵 <화산-31형>의 핵폭발 위력 검증 시험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의 빈번한 대미 탐색용 도발

- 내년 미 트럼프 정부의 대북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트럼프 취임식에 북한 대표 참석 여부와 비핵화 정책 변화 등에 관심 집중 예상
 - 주요 도발 수단으로 정찰위성 재발사, 대러 파병 확대, 개정 헌법 공개, 핵실험 실시 위협, 핵잠수함 건조 공개 가능성

□ 내년 러시아의 군사 기술지원 및 협력 증대 가시화

- 러북 간 대러 무기 지원과 파병 대가, 신조약 비준에 따른 군사협력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
 - 러북 간 북핵 인정 등 정치 거래, 핵잠수함 기술 대북 지원, 정찰위성 및

위성발사체 향상, 극초음속 미사일 탄부두 기술지원, S-400방공포대 지원, 동해상 러북 연합군사훈련 실시 등

※ 정찰위성 재발사는 북한 정찰위성의 수준 미비와 함께 한반도 정찰 순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실시할 가능성

- 핵탄두 재진입 실험을 위한 ICBM의 정각 발사 가능성
 -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관련, 현재 북한의 ICBM의 탄두 재진입 기술 미입증 상태
 -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기술이전을 받을 경우 ICBM 정상 각도 발사를 통해 재진입 기술 능력을 증명할 가능성
- 무인기 개발과 관련, 김정은이 자폭무인기 개발 시 인공지능기술의 도입을 지시, 무인기 성능 향상을 위해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 대러 파병의 대내 부정적 파급영향

- 내년 러-우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협상 우위를 위한 전투가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며 반대로 조기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에도 북한군의 파병이 필요할 전망
 - 1만 2천명 수준의 북한군의 파병 규모와 파병 병종 범위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내적으로 파병 사실의 비공개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 파병 군인 가족의 불만, 청년들의 군 기피 증가, 부대 탈영, 조기 제대 증가, 군내 위화감 증대, 탈북 증가, 대남 군사적 긴장 고조 등 부정적 영향이 부각될 전망

3) 경제 분야

□ '정비보강'에 주력

- 전반적으로 2024년 정책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정비보강'에 보다 큰 힘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

- 2025년은 ‘정비보강’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의 마지막 해
- ‘정비보강’은 신규 설비 건설 및 추가 설비능력 건설, 기존 설비의 가동률 및 효율화, 특히 금속·화학 산업이 대상
- 계획과 달리 자본재(대북 제재 대상) 수입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정비보강 계획 달성이 계속 연기
- 이에 따라 그간 북한은 농업, 주택 건설, 지방공장 건설 등 자체 설비로 추진 가능한 부문에 집중
- 러-우 전쟁 특수로 확보된 새로운 자본재 수입 통로를 최대한 활용할 전망
- 북한의 주요 자본재 수입 통로는 중국이지만, 대북 제재 이후 중국 통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
- 대리 군수품 판매 및 파병 대가로 현금, 기술, 식량, 정제유 외에 자본재가 도입되고 있을 가능성
- ※ 2023년 금속 및 공작기계 생산증대도 이와 관련되었을 가능성

□ 국영 유통망 복원 마무리 조치 박차

- 북한은 8차 당대회(2021.1)를 전후한 시점부터 무역 및 국내 자본재·소비재·식량 거래에서 시장 억제 및 국영 유통망 복원을 본격 추진
- 무역의 중앙 독점(‘지방발전 20×10’ 관련 수입은 제외), 외화사용 금지, 영농물자교류시장 도입, 양곡판매소 도입 및 국영 상점망 확대 등
- 2023년 시장거래를 사실상 금지하고 임금을 대폭 인상,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유도
- 직장 정상 출근자만 양곡 판매소에서 식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
- 향후 시장을 고사시키기 위해 임금인상에 이어 수매가 인상, 국영 유통망을 통한 식량 및 소비재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할 전망

- 수매가를 인상함으로써 협동농장 생산물의 시장 유출 차단
- 국영 유통망을 통해 시장가격보다 다소 싼 가격에 물자를 판매함으로써 시장을 자연스럽게 고사시키고 재정도 확충

□ 러-우 전쟁, 시장 불안 등이 변수

- 러-우 전쟁이 종식되거나 최소한 해결 국면에 진입할 경우, 러시아의 대 북 경제협력 수요 급감으로 자본재, 소비재, 식량 공급이 감소하고 다시 시장(암시장)이 활성화될 전망
- 이 경우, 식량 등 물가폭등이 주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 초래
 - 대러 군수물자 판매수입이 급감함으로써 외화난과 자재난이 가중될 전망

4) 사회 분야

□ 주민 체제 이탈 차단을 위한 ‘통제 및 유화’ 정책 지속

- 내년 북한 당국은 민심 이탈 방지 및 차단을 위해 올해와 비슷한 방향으로 주민관리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
 - 민생 관련, 주민들의 경제난에 대한 불만 무마를 위해 김정은의 ‘애민’ 행보를 부각하며 주민 유화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체제 불만 및 이탈 차단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사회 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
 - 예컨대, 주민들에게 전쟁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체제 이탈시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제를 운영하는 등의 공포정치도 함께 강화

□ 외부 정보 유입 차단 및 감시 강화

- 외부 정보 유입에 관한 정보 통제 및 감시는 계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
- 특히, 러시아 파병 정보에 관한 외부의 정보 유입을 통제하는 데에 총력

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관한 대내 주민관리정책은 사안별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

- 미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등으로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쟁이 조기 종료되고 파병 병사의 희생이 미미할 경우, 러시아 승리가 김정은의 파병 결단 덕분이라며 치적 홍보를 위해 주민들에게 파병 사실을 공개할 가능성 존재
- 반면,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며 담보상태가 지속될 경우, 현재와 같이 주민 동요 방지를 위해 외부정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

□ 주민 반응 고려한 통일 지우기 및 후계구도 구축

- 김정은의 통일 지우기 및 단독 우상화, 후계구도 구축 등은 주변 측근 지도부와 주민 여론 등에 따라 신중하게 수위를 조절해 나갈 것으로 전망
- 김일성, 김정일 신격화 영향으로 주민들의 선대에 대한 향수가 지속될 경우, 김정은의 통일 지우기 및 단독 우상화가 주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
- 이에 따라 주민 반응을 봐가면서 김정은 단독 우상화 및 후계구도 구축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

5) 대남 분야

□ 대통령 탄핵과 반정부 투쟁 공작

- 남북이 '적대국가' 관계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고강도 군사도발과 동시에 공작기관들을 총동원하여 윤대통령 탄핵과 반정부 투쟁 분위기를 고조
- 내년에도 북한은 용산 대통령실과 주요 기관들을 비롯, 모든 지역을 타격 목표로 하는 군사훈련과 신형 방사포 및 전략무기 실전 배치를 가시화하

면서 고강도 대남 군사도발을 지속적으로 강행

- 올해 12월 개최될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국가관계임을 강조, 향후에도 남한과 마주앉을 기회는 없으며 ‘최고 존엄’을 위해할 경우 ‘핵무력 응징’이 따를 것이라는 식의 대남 위협 예상
- 내년 초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지켜보면서 대응 입장을 발표할 것이나 미북 관계가 어떻게 변하든 한국을 철저히 배제하는 원칙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

□ 무차별적 해킹 공격과 한국민 테러·납치

- 첩보 전문가들과 해킹인력을 러시아 극동지역과 동남아 지역으로 침투시키고, 해외 블랙요원 역량을 대폭 증강해 세계 주요 정치인들과 기관들에 대한 해킹, 가상화폐 탈취와 현금화에 총력 집중
- 대남공작기관들은 북한 군부의 ICBM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맞춰 한국의 주요 기관과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불안감 조성에 주력
 - 정찰총국은 국회를 비롯한 주요 국가기관과 금융기관, 국방 및 방위산업체, 개별 인물들에 대해 더욱 공격적으로 사이버 테러 공격
 - 대적사업국은 해외 인터넷 선전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유튜브, 보이스톡, 위챗 등 사이버 공간에서 무차별적인 해킹 공격, 핵무력 자산의 ‘위력’과 남한 전역에 대한 ‘타격능력’을 과시
- 중국 동북 3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비롯한 해외 현지에서 남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첩보 수집과 남한 내 중북세력 확대를 통한 반정부 시위 유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중국과 동남아 지역 활동 공작원들이 해외에서 온-오프라인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우리 국민을 현지로 유인, 회유하여 정보수집에 활용
- 대적사업국은 정찰총국과의 합동작전을 통해 해외와 남한 활동 고정 첩자들에게 지령을 하달, 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반정부 시위를 유도하면서 남

남갈등과 친북세력 확장에 주력

- 대적사업국 소속의 대남선전기관(연락소)과 조국통일연구원, 해외 인터넷 매체들을 활용해 딥페이크와 가짜 뉴스 제작 및 유포를 공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
- 국가보위성, 경찰총국, 대적사업국 합동의 고강도 대남도발 대비 필요
- 중북 국경지역과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 교민과 파견 국민 납치·테러 공작과 남한 정착 탈북민들 유인·납치 및 복송 공작 추진
- 최근 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으로 증가하는 한국 관광객을 국가보위성 주도로 동북 3성 지역 등에서 한국인 유인·납치 가능성 다대
- 위장 탈북민들을 활용해 국내 정착 탈북민들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재입북을 유도하기 위한 공작 추진

6) 대외 분야

□ 미북 관계

- 트럼프의 당선을 기회로 미국과의 전략적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다분하나 현재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이 지난 트럼프 1기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특히 북한이 러시아라는 든든한 배경을 가진 상황에서 미북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미북 수교, 평화협정 체결,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과 CVID 방식의 핵 폐기, 인권 및 민주주의 보장을 요구하는 미국과 상호 타협, 양보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특히, 러시아가 추가 대북 제재를 막아주고 이미 채택된 제재 결의를 불이행하면서 북한에 정치, 경제, 군사적 혜택을 주고 있는 바, 미국의 대북 ‘압박 카드’는 과거에 비해 훨씬 약화된 상황
- 북한은 추가 핵 실험 위협, ICBM 및 정찰위성 발사 등으로 트럼프행정부 를 끊임없이 압박하여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경제 제재 해제 등의

- 양보를 얻어내려고 집요하게 노력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한미동맹 균열과 한국 고립 전략을 병행 추진

□ 러북 관계

-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대외관계의 제1순위에 놓고 러북 밀착을 최대한으로 오랜 기간 유지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
- 러북 신조약을 바탕으로 군수물자 지원, 파병 등을 확대하면서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수립하여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에 대응
- 원유, 식량 등 중요 전략물자 교류를 통해 김정은의 ‘지방발전 20×10 정책’ 성공을 보장하는 한편,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를 무력화하는 전략을 추구
- 러시아를 통해 친러시아 국가들,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자기구들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여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대외관계 영역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예상

□ 중북 관계

- 중국과의 관계는 북한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초미의 과제로, 중북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시도가 예상
- 김정은이 직접 중국을 방문하여 러북 밀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며 중러북 ‘3자 협력 구도’ 수립을 설득할 가능성
- 올해 12월에 예상되는 당 전원회의 개최 이후 당 국제부장, 외무상 등 고위급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의 대외정책 등을 설명하면서 김정은의 방중 의사를 전달하고 교섭할 가능성 다분

□ 일북 관계

- 일북 관계 개선은 북한 정권에게 경제적 혜택뿐 아니라 한미일 공조 균열로

한국을 고립시키고 한반도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적 사안

- 일단 일본 새 내각의 대미, 대한, 대북정책을 주시하면서 일본과의 실무급 접촉을 통해 일본의 의지를 간파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
- 미북 관계의 진전 상황에 따라 일본과의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 ‘납북자’ 문제 해결 고려와 수교 및 경제지원을 제안할 가능성 다분

□ 기타 국가 관계

- 사회주의 집권당, 좌익 정당들과의 당적 교류를 중시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
 - 중국, 베트남, 라오스 당들과의 협력·교류를 강화함으로써 각국 집권당들이 정부에 대북정책과 관련한 긍정적 건의를 하도록 유도
- 쿠바 공산당과의 교류·협력을 전문으로 하는 당관계 전임참사(당참사)직을 내년 상반기에 신설하고 대쿠바 외교를 ‘당외교’로 전환해 한국의 대쿠바 영향력을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
- 공산당, 노동당, 좌익 정당들과의 사업을 지속해 국제적 범위에서 북한의 ‘핵보유 위협’, ‘남북한 두 국가 정책’, ‘지방발전 20×10 정책’, 미북 관계 등 전략적 노선들에 대한 지지·연대 기반 구축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의 처지와 유사한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란, 파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나미비아, 앙골라, 콩고, 적도 기니, 짐바브웨, 남아공, 알제리 등과의 연대·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공세의 초점을 분산시키려고 시도
 - 중남미 지역에서 니카라과와 베네수엘라를 쿠바 이상으로 우대해 주는 방식으로 한국과의 수교를 결정한 쿠바에 자극도 주면서 중남미 지역에서의 새로운 연대 기반 확보를 추구
 -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제공한 원조·지원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인권문제’에서 북한을 변함없이 지지하도록 영향력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대북 제재 회피 ‘구멍’(loophole)으로 북한 노동력을 파견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일부 중립적이거나 미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서유럽 국가들 대상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편승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한편,
 - 유럽 지역 비정부기구(NGO)들을 대북 인도주의 지원 재개로 유도할 것으로 전망

2024년 지역 정세 평가 및 2025년 전망

II. 2024년 지역 정세 평가 및 2025년 전망

1. 2024년 지역 정세 평가

1) 미국 정세 평가

□ ‘레드 스위프(Red Sweep)’으로 끝난 선거

○ 백악관은 물론 의회 상하원 모두 공화당 승리

- 박빙일 것이라는 사전 여론조사 예상이 무색하게 미 대선에서 선거인단 (312 vs. 226)과 전국 득표율(49.9% vs. 48.3%) 모두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에게 승리
-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은 4석을 추가해 상원을 탈환하고 다수당이었던 하원을 수성하여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는 ‘레드 스위프(Red Sweep)’에 성공
- 이번 승리로 트럼프는 제22대, 제24대 대통령이었던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에 이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비연속(제45대, 제47대) 대통령에 당선

○ 역대 가장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한 트럼프 2기

- 집권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구성을 보수 성향 대법관 6인, 진보 성향 대법관 3인 체제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트럼프 2기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정부가 될 가능성

※ 2025년 1월 3일 의회 개원,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예정

□ 안보와 경제 분야를 괴롭힌 불확실성

- 종전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쟁이 격화되는 역설적 상황
 - 트럼프가 비판한 우크라이나 지원 연장과 불법이민 관련 법안이 올해 초 미 의회 통과에 실패하는 등 대선이 혼전 양상을 보이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각종 정책들의 추진 동력 약화
 -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주를 침공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등 트럼프 당선 시 종전 강제에 대비하여 오히려 전쟁이 격화되는 역설적 상황
 -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제거를 위해 레바논을 침공하고 이란과 교전하는 등 가자지구를 넘어 전쟁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서방 진영 내 균열 발생
- 경제부문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치 리스크
 -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기후변화 정책 등에 반대하면서 전기차와 반도체 등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업들의 대미 투자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등 경제 부문에서도 정치 리스크가 부각

2) 일본 정세 평가

□ 일본의 대내 현황

- 자민당의 축소된 입지
 - 정당 지지율이 비자금 스캔들 이후 계속 저조
 - 자민당은 정치자금 규정법 개정안 등을 바탕으로 지지율 반전을 모색중, 이에 자민당과 야당 간 '정국 관련 주도권 경쟁' 치열
- 이시바 정권의 등장과 자민당의 '우익 행보'
 - '이시바 정권'의 등장과 중의원 선거에서의 '단독 과반' 실패는 자민당의 '주도권 축소'를 시사, 향후 연립여당과의 '공조' 여부 중요

- 자민당 內 비자금에 대한 ‘책임소재’ 관련 혼란 여전, 이에 자민당 주류세력의 ‘지지율 ⇄ 보수결집’ 인식 역시 강화·지속 상태

□ 일본의 대외 현황

- ‘바이든 정권’ 下 미일동맹 견고화
 -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 및 한미일 공조 등 전통적 기조 유지
 - 일본은 미국과 △ 자위대-주일미군 간 연대 △ 인도-태평양 內 안보적 영향력 투사 △ 다양한 미국 주도 협의체 동참 등의 측면에서 미국의 對中 견제에 적극적으로 공조
- ‘한일 수교 60주년 맞이’에 대비한 ‘한일관계 속 未完 이슈’
 - 2024년도 기준으로 △ 교과서·방위백서에 따른 파동 △ 네이버 LINE 사태 △ 사도광산 관련 전시시설 보강 및 추도식 △ 해저 탄광 유골 발굴 △ JDZ 협정 △ 수교 60주년 기념행사 등이 잔존
 - 관련 이슈들은 한일관계 개선 기조에 영향력 파급 가능, 특히 일본 內 ‘우익적 행보’와 不可分 상태이기에 유념
- 한미일 공조에서 ‘한미일 협력 사무국’에 이르기까지
 -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부터 출발한 3국 간 공조는 안보적·경제적 측면에서 역내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전략적 구도 창출, 중러북 간 밀착에 대응할 수 있는 ‘레버리지(구심력)’ 확보에 일조
 - ‘각국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지속가능한 3국 간 공조’의 제도화를 위한 3국의 그간 일괄적 노력 유의미, 새로운 지정학적 지평 전개
- 일중관계의 ‘긴장-소통’ 간 停滯 국면
 - 對대만 전략을 둘러싼 일중 간 신경전 지속, 미중갈등과 연계된 양국 간 긴장 국면 해결 난망, ‘갈등 통제’를 위한 소통은 지속 전망
 - 특히 △ 제1도련선 관련 주일미군 동향 △ 대만과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 등은 對中 갈등 지속의 동력

- 일북관계 속 ‘북한 납치자’ 문제
 - 일북 간 대화는 러북 간 밀착 및 핵개발로 인한 정체 상태
 - 현재 정상회담보다 양국 간 연락 사무소 설치논의 쪽으로 이행
- ‘다양한 지역 거버넌스 활용’과 ‘첨단기술·방산·연합훈련 內 공조’
 - 인도-태평양, G7, G20, ASEAN+α, APEC, EU, 글로벌사우스 등을 기반으로 한·미·영·호주·필리핀 등과의 안보 공조 강화 추동

3) 중국 정세 평가

□ 2024년 대내 정세 평가

- 제로 코로나 전환 이후 경제 회복에 총력
 - 중국은 2023년 제로 코로나 정책 전환 이후 안정적인 체제 유지 및 경제 회복을 통한 재도약의 기반 마련 및 대내 긍정 환경 조성에 집중
 - 2023년 중앙경제공작회의(2023.12.11.~12)에서 2024년 경제업무 총 기조로 ▲안정 속 발전(穩中求進), ▲발전으로 안정 촉진(以進促穩), ▲먼저 세우고 나중에 부수기(先立後破) 등 제시
 - 2023년 7월 20기 3중전회를 개최하여 진일보한 포괄적 개혁 심화를 재천명하고 중국식 현대화 실현에 총력 투쟁을 전개
 - 중국 당국의 경제 회복 총력 투쟁 결과 3분기 GDP 성장률이 4.8%를 기록하는 등 외형적인 지표는 양호하나 지방부채, 투자 감소, 수출 하락 등 구조적 위험은 여전히 잠복
- 정치국 회의 개최 등 예정된 정치일정 소화
 - 2013년과 2018년 당과 국가기구 개혁으로 정치국 회의의 위상 및 역할에 일정한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에서도 2024년 정치국 회의는 월 1회 개최의 기존 관행을 준수
 -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소집 주체로서 정치국의 위상과 역할은 여전히 작동되었고(2024년 4월 30일 정치국 회의), 경제문제에 대한 방향과 기조

정립에서도 기존 역할을 반복 수행

- 두 차례 기구개혁 추진 이후 위원회 역할과 시진핑 총서기 개인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정책 결정과 조정이라는 정치국 회의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약화

○ 시진핑의 권한은 흔들림 없고 오히려 공고화

- 2024년 순시업무 강화, 기율과 규율 강조 강력한 사정 활동 전개, 20기 3중전회 학습 및 교육 분위기 확산 등 전 사회적으로 당과 시진핑 주석 지도력 심화를 위한 노력이 광범위하게 전개
- 리샤오핑 교통운수부 부장의 은퇴, 이렌홍 저장성 서기 은퇴 등 성부급 인사 만 65세 규정이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지는 인사 관행 지속
- ‘70후’ 스푹후이(时光辉) 구이저우성 부서기가 네이멍구 부서기로 이동하는 등 성간(省間) 이동, 부문 간 이동, 지역 간 이동, 기업·정부 간 이동 등 ‘70후’와 ‘75후’의 인사 활발
- 사정 드라이브와 20기 3중전회 결과에 대한 학습 및 교육 강화, 인사 교체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2024년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은 흔들림 없었고, 여전히 공고하게 작동

□ 2024년 대외 정세 평가

○ 미중 대립 구도 속에서 중국의 독자 외교 전략 집중

- 중국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미중관계에 맞춰 ▲글로벌 사우스 접근 강화 ▲지역 협력 강화 ▲경제안보와 자원외교 확대라는 세 가지 주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외교정책을 추진
- 중국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변혁을 위해 다극화를 추동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혁하기 위해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를 내세우면서 ‘글로벌 사우스 접근 외교’를 강화해 나가는 데 주력
- 중국은 SCO, BRICS 등 ‘다자주의 외교’와 지역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아세안과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심화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체계를 견제하는 데 주력

- 중국은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에 대응하여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경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경제외교에 주력

○ 미국 대선 계기 안정적 미중관계 관리 주력

- 중국은 작년 12월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미중 정상 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핵심이익 존중, 공정한 경쟁 등을 강조한 바 있음
- 중국은 또한 경제 하강 등 복잡한 대내외 상황 속에서 11월 미국 대선으로 국내 정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정치 상황을 활용하여 안정적 미중관계 관리에 주력
- 중국은 트럼프 당선자에게 “미중관계의 안정이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관건”이라는 기본 입장을 강조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한 신뢰 증진 및 문제해결의 자세”를 요구

○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따른 양안 긴장 지속

- 금년 1월 실시된 대만 16대 총통 선거(1.13)에서 독립지향 민주진보당 라이칭더(賴清德) 후보의 당선으로 양안관계는 더욱 긴장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발전
- 대만 총통 선거는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선호하는 후보와 중국이 지지하는 후보가 극명히 달랐기 때문에 ‘미중 대리전’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결과 역시 미중관계에 영향 초래
- 중국은 과거 차이잉원 당선외의 경우, 1년간 관망세를 유지한 뒤 ‘압박 모드’로 전환했으나 라이칭더 당선 후에는 관망 없이 곧바로 군사·경제적 압박 모드로 진입하였으며, ‘회색지대’ 전략을 강화

○ 한중관계, 중일관계 개선 등 주변외교 강화 주력

- 중국은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미국의 주도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해 주변외교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접근을 강화

- 중국은 4년 반 만에 한국에서 재개된 한일중 정상회의(5.27)에 참가했으며, 지방 및 중앙 차원의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고, 페루 APEC정상회의 계기 한중정상회담(11.15), 중일 정상회담 등을 추진
- 금년 들어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적극적 접근은 미중 대립구조 하에서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견제하고, 공급망 포함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역내 영향력 제고 의지를 반영

4) 러시아 정세 평가

□ 푸틴의 3.17 대선 압승과 집권 5기 출범

- 푸틴은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치러진 대선에서 현대 러시아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로 압도적 승리
 - 러-우 전쟁 3년차에 치러진 ‘신임투표’ 성격의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은 87.28%의 압도적 득표율로 나머지 세 명의 야당 후보를 제치고 승리함으로써 5선에 성공
 - 푸틴의 이 같은 승리는 △전쟁 상황 하 ‘안보 결집 효과’ △무난한 경제 상황 △푸틴의 과(過)보다는 공(功)에 비중을 둔 여론 △러시아인의 보수성·순응성·회피성 등의 작용 결과
- 2024년 5월 7일 출범한 푸틴 5기 신정부는 내각과 대통령실을 구성하고 2030년까지의 국가발전 목표 제시
 - 푸틴은 △장기 소모전의 안정적 수행 △거시 경제적 안정성의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 국방장관 교체와 일부 차세대 테크노크라트 영입을 통해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적 구성을 완료
 - 푸틴은 PPP 기준 GDP 세계 4위 달성 등의 목표를 담은 「국가발전 목표에 관한 대통령령」(5월 대통령령)에 서명하고 기존의 균일 소득세제를 누진 소득세제로 변경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 모색

□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 강화와 우세한 전황 유지

- 2023년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을 저지한 러시아는 2024년 동부 전선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세를 지속
 - 러시아는 △소모전 전략 △우세한 인적·물적 자원 △이란/북한 등 외부 지원 등을 통해 동부전선(돈바스 전선)에 공세의 예봉을 집중하고 점령 지역을 꾸준히 확대
 - 이 같은 상황은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에 대한 전쟁 서사를 약화시켰으며, 미국/서방과 우크라이나 내부에 전쟁 피로감을 꾸준히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전격적으로 침공하여 전황 반전을 모색했으나 실패로 귀결
 - 우크라이나군이 △전쟁 서사의 전환 △서방 지원의 유지·확대 △러시아의 공세 분산 △협상 지렛대 확보 등을 목표로 2024년 8월 6일 3개 축선을 중심으로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전격 침공
 - 그러나 러시아가 상실한 영토의 약 50% 정도를 탈환한 가운데 미국이 사거리 300km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현재 러-나토 간 분쟁의 확대 가능성 대두

□ 對중/북 연대의 심화와 제16차 브릭스 정상회의 개최

- 러시아는 중국과 연대를 심화하는 가운데 브릭스 정상회의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접근 강화
 - 러중은 2024년 △베이징(수교 75주년) △아스타나(SCO 정상회의) △카잔(브릭스 정상회의) 등 정상회의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와 다극질서 구축에 대한 의지 재확인
 - 러시아는 2024년 10월 22~24일 사흘간 카잔에서 제16차 브릭스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브릭스의 국제적 영향력 △다극질서 형성의 대세성 △자국의 국제적 고립 탈피를 과시

- 러시아는 2024년 6월 19일 평양 정상회담 등을 통해 對북 밀착·연대를 심화
 - 푸틴-김정은 간 정상회의를 통해 러북 양국은 유사시 군사적 상호원조를 명시한 <포괄적·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이하 신조약)을 체결하고 동년 11월 이를 각각 비준
 -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각종 소모성 무기를 조달해왔으며, <신조약>의 제도적 토대 아래 북한군을 쿠르스크 전장에 투입하는 등 제 영역에서 對북 협력을 한층 가속화

5) 동남아시아 정세 평가

□ 아세안 지역 정세: 공동체의 단결성 와해와 중심성 약화

- 중국의 對미얀마 영향력 확대, 아세안의 對미얀마 영향 축소
 - 미얀마 내전 속에서 군부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 강화되고, 미얀마 군부를 중국 주도의 다자 안보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ASEAN의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상실
 - ※ 중국은 미얀마와 캄보디아를 상하이협력기구(SCO)의 대화 파트너로 지정
 - 미얀마에 대한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ASEAN 정상회의에 미얀마의 ‘비정치적’ 대표를 참여시켰지만, 군사 정권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
- 중국의 공세적 해상활동으로 남중국해 분쟁이 격화되면서, 갈등 해소를 위한 해법 모색에 난항
 - 올해 아세안+1 정상회의에서 4개 회원국(필리핀·베트남·싱가포르·태국)은 중국의 해상 활동에 우려를 표하며 행동규약(COC)의 조기 체결을 주장했으나, 해당 내용은 공동성명에 반영되지 못함
 - 아세안 10개국이 제안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공동성명 초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함
 - ※ 종리는 △‘남중국해와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중동이 역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문구와 △남중국해 문제 해법과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을 언급한 내용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짐

- 아세안 국가에 대한 미중 경쟁은 회원국 간 분열과 아세안 중심성 약화 초래
 - 미국은 필리핀을 역내 소다자 협력체(JAPHUS, Squad)에 참여시키는 반면,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BRICS)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를 파트너 국가로 승인

□ 미중간 전략경쟁 심화와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

- 미국의 역내 영향력 약화와 중국의 반사이익
 -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협력상대국 선호도 조사’에서 중국이 50.5%를 차지하며 올해 처음으로 선호도 순위에서 역전
 - ※ 과거 동일한 내용의 여론조사에서 2000년(50.2% vs. 49.8%)과 2023년(61% vs. 39%)에는 미국이 우세하였으나 올해 처음으로 역전
 - 미국의 역내 리더십 약화 배경으로는 △경제 제재의 무기화 및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반감, △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한 무슬림 국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브루나이)들의 반감 등이 지적

□ 총평 및 한국과의 관계

- 올해 아세안은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재건에 치중한 나머지 역내 안보 이슈에 소극적으로 대응
 - 올해 의장국인 라오스는 ‘연계성과 회복성(Connectivity and Resilience)’을 주제로 선정하여 경제 회복에 주력
-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를 구축하며 양자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계기 마련
 - 한-필리핀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고, 2025년에 싱가포르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합의하는 등 개별국가와 협력 관계를 강화

6) 유럽 정세 평가

□ 대내 현황

- 경기 및 산업 경쟁력 침체와 극우 민족주의 세력의 상승
 - 유럽 경제의 심장인 독일의 역성장과 전기차와 같은 핵심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추월 및 경쟁력 강화로 인해, 유럽 경제의 성장 동력의 중장기적 위축 가능성 증대
 - 지난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서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극우 민족주의의 계열 정치세력이 선전함으로써, 향후 유럽통합 가속화 및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강화에 대한 부정적 기류 형성 가능성 증대
 - 대안당(AfD)을 중심으로 한 극우 세력의 지지도 상승으로 인해, 독일의 현(現) 솔츠 연정 내각의 불안정성이 증대됨과 동시에, 독일의 강경한 이민 및 국경 통제 정책 본격화
 - 7월 프랑스 총선에서 극우 민족주의 계열의 국민연합(RN)이 사상 첫 세자릿수 의석을 확보하며 원내 3당으로 등극하여, 현 마크롱 정부의 국정 운영에 경시 못할 위협 요소로 등장

□ 대외 현황

- 전략적 자율성 및 자체적 군사·안보 역량 강화 추구
 - 유럽연합은 유럽 공동 방산 육성 전략추진을 통해, 유사시 유럽의 재무장 촉진 및 유사시 미국·한국 등을 통한 대량 무기 조달의 대외 의존성 감소 유도
 - 유럽 국가들은 나토 우크라이나 기금 창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미국의 우크라이나 개입 및 지원 축소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
 - 독일은 국방예산 증액, 모병 확대, 미국 전술핵 재배치, 리투아니아 내 자국군 주둔 확대 등을 통해, 자국의 재무장 촉진과 더불어 대외 군사 활

동 확대 및 대(對)러시아 군사 억지력 강화

- 프랑스는 2024-2030 군사 계획법을 통해 자국 군사력 증대를 가속화함과 동시에, 유럽 차원의 자국 핵전력 공유 제안을 통해 역내 자체적인 핵 억지력 보유 필요성 제기

2. 2025년 지역 정세 전망

1) 미국 정세 전망

□ 미국 우선주의 경제안보정책 추진

○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물질적 이익에 기초한 정책 기조

- 트럼프 대통령은 추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불필요한 국력 낭비를 가져왔고, 미국의 동맹국들 역시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에 무임승차해왔다고 인식

- 따라서 보편적 규범이나 가치보다는 물질적 이익에 기초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ism)’가 국가통치 원칙이 될 전망

- 미국 우선주의는 △동맹들에게 더 많은 방위비와 역할을 분담시켜 미국의 군사작전 비용을 줄이고 △중국과의 디커플링 및 해외 생산기반 미국 귀환(리쇼어링)을 통해 미 제조업을 재건하는 것이 핵심

- 또한 불법이민을 막아 저소득 일자리를 보호하고, 재정적자 감소와 규제 완화 및 철폐를 통한 ‘작은 정부’를 지향

※ 트럼프1기 때 반이민정책을 고안해낸 스티븐 밀러와 톰 호먼을 각각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국경 차르(Tsar)로 임명

※ 정부 규제 철폐와 예산 삭감을 담당할 ‘정부효율부’에는 일론 머스크와 기업이 출신 정치인이자 공화당 경선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가 수장과 부수장으로 각각 내정

○ 경제 정책의 초점은 경제 회복, 물가안정 및 자국 산업 보호, 에너지 안보 및 자립 등에 맞추어질 전망

- 법인세 인하(현행21% → 15%) 등 대규모 감세 및 규제완화, 금리 정상화, 연방정부 예산 삭감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 미국산 우선 구매(Buy American) 정책을 통한 제조업 부흥을 시도하는 한편, 에너지 자립을 위한 미국 내 전통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등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축소 전망
-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 및 고율관세 기조 속에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 강화 및 국력 우위에 기반한 양자 무역 협상 추진 전망
 - 이미 트럼프는 미국-멕시코-캐나다 FTA협정(USMCA)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중국산 물품에는 추가 10%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이며 모든 수입품에 10-20%p 보편관세 부과를 공언
 - 미국 수출품에 관세 부과 시 동일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 추진 및 무역 흑자국·환율조작국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등 관세의 협상 도구화 가능성
 - 트럼프가 관세 인상으로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넘어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분 만회, 미국 내로의 제조업 기반 귀환 유도, 산업 재건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노린다는 점에서 관세 인상은 불가피
 - 특히 대미 경상흑자 폭이 큰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서유럽국가, 한국, 일본, 대만 등도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의 표적이 될 우려
 - ※ 백악관 무역차르로 임명이 예상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前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그의 비서실장이자 트럼프2기 초대 무역대표부 대표로 지명된 제이미슨 그리어는 대중 강경론자
-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국내법의 역외적용 가능성이 높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첨단·신흥 기술에 국한되던 수출통제 조치가 더욱 확대될 경우 중국에 저사양 반도체 생산 시설과 인프라를 구축 해놓은 한국 등 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보조금 정책은 계승되겠지만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른 외국 기업 보조금 축소 혹은 미국산 중간재·부품 사용 의무화(local content requirement: LCR) 요건 강화

가능성

- 트럼프는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의 상당 부분이 공화당 지역구에서 발생하고 있어 IRA 보조금 폐지보다는 LCR을 강화할 가능성

※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작은 뜰에 높은 벽’에서 ‘벽’은 여전히 높지만 ‘뜰’, 즉 수출통제 적용 대상을 반도체 등 핵심기술을 넘어 일반 제조업 생산품까지 확대할 전망

-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USMCA로 교체한 전례를 고려할 때, 다자 간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 및 양자 무역협상 시도 가능성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 탈퇴 등 다자 간 무역협정 재협상 추진 가능성

□ 거래적 동맹관 : 가치공동체에서 이익공동체로

- 무형의 가치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는 국제안보를 위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무익하며,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에 무임승차해 온 동맹국들은 방위비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고 인식
- 그 결과 미국 전통 안보관인 ‘규범과 가치’의 공유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동맹-비동맹 구분법이 트럼프의 동맹관에서는 미국에 경제적 또는 군사적 부담을 주는 국가와 이익을 주는 국가로 대체
- 다만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도 국가간 힘의 서열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미국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대중 견제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
- 트럼프 2기 인태전략을 추진할 백악관 NSC와 미 국무부 인선을 들여다 보면 정통적 동맹관을 가진 대중 강경파 다수 포진
- 트럼프 2기 외교안보 분야 정책 관련 최우선 관심사는 러우전쟁 종전 여

부가 될 전망

-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원 중단을 위협해 전쟁의 조기 종식을 도모할 것으로 보이며, 전후 우크라이나 군사력 재건과 지원 비용은 유럽 국가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할 전망
 - ※ 중동 전쟁은 하마스 전멸, 헤즈볼라 무력화와 이란의 확산 기피로 인해 사실상 이스라엘의 일방적 승리로 종결될 가능성
- 트럼프2기 미국은 동맹국들의 국방예산 증액, 안보 비용 및 역할 분담 등을 요구할 전망
 - GDP 2%의 국방예산 투입 기준에 못 미치는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국방비 증액 압박이 있을 것이며, 한국·일본·호주 등에 대해서는 안보 비용 및 역할 분담 요구 수위를 높일 전망
 -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점을 두었던 격자형 안보구조 개편 등을 시도할 경우 동맹 네트워크의 약화·이완 우려
 - 다만 트럼프 1기에 출범한 QUAD, 대중 견제를 위한 핵심 동맹국들인 한국·일본과의 3각 안보협력 및 AUKUS 등은 유지될 전망
 - ※ 바이든 행정부와 차별성을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의 리브랜딩 필요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미북 직접협상 가능성

-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해 온 바, 북한과 미국 간 대화 추진 가능성이 예상되나 미북협상이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전망
 - 러우전쟁 및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미북대화의 정책 우선순위가 다소 떨어질 가능성
 - 특히 북한의 입지가 2019년에 비해 크게 강화되어 있고 이벤트성 만남에 대해 김정은이 회의적인 시각을 계속 보이기 때문에 협상 의제 조율에 시간이 걸릴 전망

-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위협 감소에 초점을 맞춘 협상이 진행될 경우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 발생 우려
- 한미관계에서는 이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종료되었음에도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한국 측의 추가 비용 부담을 압박할 가능성
 - 한미연합훈련,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과 관련된 비용 청구 가능성이 높으며, 전시작전권 전환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우려
 - 한국으로서는 비용 분담에 따른 적절한 반대급부를 확보할 수 있는 협상 전략 마련이 긴급

□ 정책적 시사점 및 고려사항

- 트럼프 2기는 백악관과 의회 상·하원은 물론 대법원까지 보수 세력이 장악한 바, 근래 어느 행정부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력 확보
 - 특히 트럼프 2기는 재선에 대한 고려가 필요 없는 바, 임기 초반부터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
 - 동맹에 대한 거래적 관점의 접근과 보호무역 기조의 통상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가정하고 대응을 준비할 필요
- 트럼프 2기의 궁극적 목표가 대중 경제와 미 제조업 재건으로 압축된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
 - 트럼프는 동맹 방어를 위한 비용은 줄이나 동시에 군비확장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압도적 군사력 우위, 즉 ‘힘을 통한 평화’ 유지를 희망
 - 트럼프는 미국 내 방산 생태계를 재건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한국 제조업 경쟁우위 활용 의지를 보유했다
- 미북 직접협상 추진으로 확장억제의 신뢰도가 약화되지 않도록 한미동맹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기조를 유지
 - 미북협상의 실질적 성과 도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한국이 제시하는 등 주도권을 행사할 필요

2) 일본 정세 전망

□ 이시바 정권의 불안정성 지속

- 자민당의 과반획득 실패로 이시바 총리, 불안정한 정국운영 불가피
 -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2024년 10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패배하고 과반획득에 실패하면서 소수 여당으로 전락
 - 자민당 내 '비주류파'였던 이시바 총리는 야당과의 정책협의의 어려움과 舊아베파 등의 당내 압박 등으로 불안정한 정국운영은 불가피
- 이시바 총리, 전후 최단 총리 등극 가능성도 내재
 - 10월 중의원 선거의 패배와 트럼프의 귀환으로 일본 정, 재계가 향후 대응에 고심할 것으로 예상
 - 2025년 7월 참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이시바 정권은 단기 퇴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미일동맹 강화 재정비 및 한미일 협력 가속화

-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미일동맹 강화 재확인
 -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기 정상회담을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미일관계 강화에 대한 재확인에 나설 것으로 전망
 - 미일동맹은 일본 외교안보의 기축이자, 2019년 이후 5년 연속 대미투자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방위분담금 인상, 관세 인상 등에 대한 대응 마련에 주력
 - ※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일 간 인식의 차가 내재하고 있고, '가치와 체제' 중심의 일본 외교와, '미국제일주의'의 미국 외교에 균열발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한미일 협력 공고화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변수가 내재
 - 2024년 11월 20일 출범한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중심으로 한미일 협력 제도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트럼프 정부의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의 인식여부가 변수로 작용 전망

- 캠프 데이비드와 같은 한미일 정상회의는 어려울 수 있으나, APEC, G20 등의 다자회의 기간 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통해 한미일 협력에 대한 필요성 및 공고화 논의 전개 예상

○ 일중관계 개선은 불투명

- 2024년 11월 페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계기 일중 정상회의에서 ‘전략적 호혜 관계’ 추진을 재확인했으나, 일본의 대중정책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진전은 어려울 것
- 트럼프 2기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국 경제 의존도는 낮추는 디리스크(de-risking)정책은 지속될 것이며, 대만 TSMC 및 일본 내 반도체 협력은 한층 강화

○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일북 대화 추진 방침은 지속

- 이시바 정권에서도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일북 대화 시도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은 외교우선 순위를 미국에 둘 것인바,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다만 미북 간 접촉 또는 미북 정상회담 개최 시를 상정, 일본의 납치문제 등 일본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 배가

○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속 및 글로벌사우스 관계 구축 강화

- 아베정부 시기 이후 추진해온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은 미일동맹과 함께 변함없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
- 아베 정부시기 강화된 영일관계를 기축으로 2023년 1월 전투기 공동개발에 합의하였고, 연합 군사훈련을 강화 추세를 이어, 유럽과의 안보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

※ 특히 기시다 정부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글로벌사우스 지역에 대한 ODA, 투자 및 일본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전지구적 규모로 일본 외교력 강화 확대 노력 지속 전망

□ 정책 시사점 및 고려사항

-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향후 고려사항
 - 日의 '외교적 부채 의식' 묵과 방지 및 한미일 간 의원교류 기획·추동을 통한 '일본 內 우익' 관련 제동장치 확보 → 이시바 총리의 '한일관계 개선=지지율 상승' 공식 관련 인식을 위한 접근법 개발 필요
 - 양국은 △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IP4 △ 한미일 프리덤앳지 3차 연합훈련 △ 방위산업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을 공동논의 필요
- 한미일 협력 공고화에 노력
 - 2025년도 오사카 박람회, 한일 수교 60주년, 경주 APEC정상회의 등 정상 간 회담의 계기를 활용하여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 트럼프 2기를 맞아 미국 주도의 한일 관계가 아닌, 한일 협력을 통해 미국을 견인하고 한미일 협력을 공고화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 필요

3) 중국 정세 전망

□ 2025년 대내 정세 전망

- 20기 4중전회를 통해서 당의 정치적 역할 강화
 - 3중전회가 일반적으로 경제 개혁이나 비전에 관련된 회의라면 4중전회는 역대 사례로 보면 정치개혁이나 당의 영도제도 개혁에 집중됨
 - 따라서 2025년 20기 4중전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의 영도제도, 당 중심 거버넌스 강화, 법치 강화 등 당의 정치 활동에 대한 중심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특히 2023년도에도 계속된 반부패 운동이나 기율이나 법규 위반에 대한 전 방위적인 사정을 통해서 관료사회 단속 및 사회 이완 분위기를 수축하는 노력 병행 전망
 - 당의 영도 및 집권 능력 강화에 따른 당풍(黨風) 운동 및 정치건설의 강화는 당원의 피로감을 증폭하고 사회 전반에 당의 영향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 당 외 부문의 자율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활발한 인사교류를 통한 관료사회 분위기 쇄신

- 2023년 연말을 전후하여 성부급(省部級) 인사이동 및 청국급(廳局級) 순환 근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2025년 3월 양회(兩會)에서 국무원 및 국무원 산하기관 인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중앙 차원의 인사는 각 성급(省級)이나 지급(地級) 인사를 추동하여 전국 단위에서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두각을 나타내는 차세대 인사들이 면면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
- 특히 성간 이동이나 중앙과 지방 간 이동은 관원 충원과정에서 중요한 관찰 포인트라는 점에서 2024년 정치과정의 인사교류가 주목 포인트로 부상

○ 경제 회복 및 사회통합에 자원 투입 강화

- 시진핑 주석은 2024년 푸젠성, 안후이성, 후난성, 간쑤성 등 지방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정책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경제 회복 및 지방 발전을 독려해 왔음
- 2025년 역시 최고 지도자의 지방 현지 현장 방문을 통해서 경제 회복 및 사회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를 당과 국가의 미래 비전으로 연결하는 현장 중시 지도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
- 시진핑 주석은 여러 현장 방문을 통해서 녹색 성장, 환경보호, 농촌부흥 등 현장 메시지를 계속 발신할 것으로 보여 현장과 메시지가 결합한 복합적 의미를 자세히 탐색할 필요성 다대
- 2024년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완만한 경제 회복 기조에 정책 수단을 동원했다면, 2025년에는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자원 투입에 더욱 정진하는 등 강력한 지도력을 활용한 사회경제적 성과 내기에 주력 예상

□ 2025년 대외 정세 전망

-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재등장에 따른 미중관계 불확실성 증대
 -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중관계는 위기관리(derisking)에 주력했던 바이든 행정부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압박과 견제에 직면할 것이며 양국관계의 불확실성 증대 전망
 - 중국은 트럼프가 “거래에 능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중국 내 ‘금융시장 개방’, 중국 최대 배터리회사 CATL의 미국 내 공장 설립 등 ‘거래의 조건’을 만들고 내세워 협상을 통한 관계 관리에 주력할 전망
 - 그러나 트럼프 진영은 중국을 적(foe)으로 간주하고, 중국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주장하며, 60% 관세부과와 전략적 분리(decoupling)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2025년 미중관계의 불안정 고조 예상
- 대만문제와 남중국해 등 주요 안보 사안 긴장 고조
 - 중국은 대만문제가 양보·타협할 수 없는 핵심이익(核心利益)이고, ‘중국의 꿈(中國夢)’을 완성하는 3대 요소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최고지도부가 직접 나서 ‘절대 양보 불가’ 입장 표명
 -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와 별개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등 흔들리지 않는 방위 공약을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대선 기간 대만에 미군 주둔 필요 등을 거론
 - 2024년 5월 등장한 라이칭더 민진당 정부는 전임 차이잉원 정부에 비해 더 독립 지향적이란 점에서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카드 활용 여부에 따라 대만해협과 지역 정세의 긴장 및 불안정성 증대 전망
- 러북 밀착 및 한중관계 개선 추세 지속
 - 중국은 금년 들어 한중간에 최고위급을 포함한 각급에서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 간 양호한 소통의 모멘텀 지속과 별개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밀착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내년 한중 관계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내년 경주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習近平) 방한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 그러나 2025년 한중관계는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과정 및 분위기 관리와 공동성명에 담긴 합의 내용 등 관련, 향후 양국의 치열한 '기싸움'과 간극 좁히기의 '교차로'에 직면할 전망

□ 정책 시사점 및 고려사항

- 한중관계 관련 우리 정부는 경제협력 등 분야에서는 '상호이익'을 강조하며 '협력적 자세'를 취하는 동시에 북핵과 한미동맹 등 안보 문제에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
 - '북한군 파병' 등 러북 군사밀착이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불량국가' 북한에 대한 지지가 국제여론에 반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중국의 러북 군사밀착 견제 유도
 - 트럼프가 재집권해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미국의 기조는 변함없을 것이란 점에서 미중관계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대비하면서 국가이익 중심의 선택적 명확성 추진
 - 트럼프 행정부 등장 계기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것에 대비하여 우리의 해양교통로(SLOC) 안정 확보 등 마찰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대비 태세 모색

4) 러시아 정세 전망

□ 체제 안정성과 2026년 총선 준비

- 푸틴과 크렘린은 러-우 전쟁이 지속하는 가운데 △체제와 거시 경제적 안정성 △2026년 총선 준비에 주력할 전망
 - 푸틴은 우세한 전황을 바탕으로 엘리트 결속과 대중적 지지 등을 통해 체제 안정성을 유지·강화하고, 막대한 재정 지출에 따른 경기 과열과 인플레이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

- 푸틴과 크렘린은 러-우 전쟁과 국내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6년 9월 예정된 총선에 대비해 여당 '통합러시아'의 압도적 승리를 담보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집중할 전망
- 러시아는 러-우 전쟁 종료 시 우크라이나 내 점령 지역의 '러시아화'와 재건·복구 사업에 주력하고 이를 체제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
 - 푸틴과 크렘린은 점령 지역의 영구적 '러시아화'를 위해 효과적 재건·복구 사업의 수행과 동 지역 인구의 통합 작업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對우크라이나 군사 요새로 만들기 위해 노력
 - 점령 지역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통합은 푸틴이 국민들에게 러-우 전쟁의 승리를 확인시키고 그들의 지지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외부에 체제의 견고성과 안정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

□ 트럼프 2.0의 등장, 그리고 러-우 전쟁과 미러관계의 미래

- 트럼프가 러-우 전쟁의 신속한 종식을 호언장담해온바, 미국 신정부의 출범 이후 평화협상의 재개 가능성 다대
 - 트럼프는 대선전 과정에서 러-우 전쟁의 신속한 종료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고, 신정부 출범 이후 종전 논의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전망
 - 트럼프는 자국의 재정·군사 역량을 압력 수단을 활용해 키이우와 모스크바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 모아 양자 간 타협·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전쟁을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구상
- 러시아는 우세 전환을 지렛대로 평화협상 시 우크라이나/미국/서방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는데 주력
 - 러시아는 △점령 영토의 병합 △우크라이나의 중립화(나토 가입 불가) 요구를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자 관철이 상대적으로 쉬운 사안으로 인식
 - 다만, 러시아는 트럼프 신정부 종전 구상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자체 무장력 유지·강화 문제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며, 동 사안을 매

개로 키이우/워싱턴과 치열한 줄다리기를 지속할 전망

- 다만, 러-우 간 입장차가 매우 커 평화협상이 교착 또는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존재
 - 러시아가 전쟁의 '동결'이 아닌 '해결'을 주장하고 있고, 점령 영토에 대한 법적 처리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즉 종전 후 키이우의 자체 무장력 수준에 대한 합의도 결코 간단치 않은 쟁점이 될 전망
 - 트럼프가 러시아의 협상 불응 또는 합의 실패 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이고 강력한 지원을 약속한바 있어, 향후 유럽 내 무력 분쟁이 추가 확대(escalation)될 가능성도 배제 불가
- 무엇보다 미리 관계를 압박하는 구조적 제약에 주목할 필요
 - 트럼프의 말처럼,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중재·관여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다면 그것은 현 미리 대립 국면에서 소위 양자 간 데탕트의 계기를 제공
 - 다만, 국제질서의 변동·재편이라는 구조적 환경과 의지·행동의 측면에서 대척점에 서있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양자 관계가 본질적으로 대립적일 수밖에 없음은 분명해 이 같은 구조적 제약에 주목

□ 정책적 시사점과 고려사항

-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러-우 전쟁과 미리 관계에 대한 유동적 전망 하에서 신중한 접근을 모색
 -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평화협상의 재개와 신속한 종전 △양측 입장 조율 난항에 따른 평화협상 교착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염두에 둘 필요
 - 러-우 전쟁의 유동적 전망 하에서 트럼프 신정부의 관련 정책에 협력적 입장·태도를 견지하면서 당분간 워싱턴과 모스크바를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는 조치를 자제하면서 상황의 전개를 주시

- 러북 관계가 장기적·전략적 관점에서 지속·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對러 전략을 입안·집행
 - 러-우 전쟁이 러북 양자 관계의 급진전에 강력한 추동력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나, 양국이 여러 장기적·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어 전쟁 종식 후에도 양자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가능성 다대
 - 러북 밀착·연대의 부정적 후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러시아에 명확하게 레드라인을 제시·경고하고, 전쟁 종료 시 양자관계의 복원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양면 전략을 구사

5) 동남아시아 정세 전망

□ 아세안의 리더십 교체에 따른 기회와 도전

- 2025년 의장국 말레이시아, 안와르 총리 리더십에 기대와 우려 공존
 - 라오스가 민감한 역내 안보이슈를 회피해온 것과 달리 말레이시아는 이들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
 - 안와르 총리는 글로벌 현안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으며, 미얀마와 남중국해 갈등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 표명
- 말레이시아의 정책 우선순위, 친중노선 등을 고려할 때 갈등 해결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도쿄 ‘아시아 미래 정상회의’에서 안와르 총리는 2025년 아세안이 경제, 무역 및 투자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
 - 말레이시아가 브릭스 가입 신청을 한 상황에서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중국에 적대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

□ 아세안의 단결력과 중심성을 위협하는 도전요인

- 회원국 간 주요 안보 이견은 아세안 협상력 약화와 중국에 분열을 이용할 여지 제공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역내 민주주의 국가들은 미얀마 군부의 5개 합의안 준수와 민주주의 복귀를 촉구하는 반면, 브루나이, 캄보디아, 태국 등 군주 국가들은 이를 단순히 미얀마의 내정 문제로 인식
- 외교적으로 고립된 미얀마에게 중국이 제공하는 소다자 협력 플랫폼은 아세안 공동체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중국과 자주 대립하는 베트남과 필리핀은 구속력 있는 행동규약 체결을 원하는 반면, 친중 국가인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
- 아세안 개별 회원국의 리더십 전환으로 아세안의 단결력 약화 가능성
 - 올해 리더십 교체가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을 포함해 최근 몇 년 동안 리더십 교체를 경험
 - 각국의 리더십 교체가 지역 연대 강화와 경제적 통합을 추동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정치안정을 위해 국내문제 해결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커 아세안 단결력 강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 속 미국의 영향력 약화 전망

- 중-아세안 경제협력을 통해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
 - 올해 아세안+1 정상회의에서 ‘중-아세안 자유무역협정(CAFTA)’ 업그레이드에 합의했으며, 내년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돼 양자간 경제적 유대관계는 더욱 강화
 - 시장개척과 투자확보를 위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브릭스 러시(BRICS Rush)는 내년에 가속화될 전망
 - 시진핑 주석이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글로벌 발전지원 8개 행동계획’에 따라 아세안 빈곤국가에 대한 과학기술 및 인프라 지원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
- 트럼프 2기는 아세안 내 미국 영향력을 약화 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그동안 아세안 국가들의 반감을 불러왔던 보호주의, 親이스라엘 정책이 트럼프 2기에도 지속 될 전망
- 미국 우선주의(MAGA)를 앞세운 통상 압박과 관세 장벽이 현실화 될 경우, 아세안에서 미국의 역내 입지는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

□ 정책 시사점 및 고려사항

- 아세안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의 경제안보·자원안보에 핵심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안보협력 강화 필요
 - 아세안과의 경제·문화적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역내 이슈에 대한 전략적·안보적 관여를 강화해 한국의 전략 파트너 입지를 확고히 할 필요
 -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은 우리의 전략적 이익과 직결되는 이슈로, 이를 위해 미국과 우방국뿐 아니라 ASEAN과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
- 미국 정권교체와 글로벌 분쟁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對아세안 헷징 전략 수립
 - 개별 아세안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

6) 유럽 정세 전망

□ 역내 군사 안보 질서 안정화 및 전략적 자율성 확보 추구 지속

- 대서양 동맹 유지 속 디커플링 전략 지속 및 인도태평양 역할 확대
 - 미국과 동맹 관계 유지 및 나토와의 연계 확대를 추구함과 동시에, 유럽의 신속한 군사력 증대 및 방산 강화를 통한 독자적인 안보 역량 건설 촉진
 - 러시아의 승전 내지는 추가적인 군사·지정학적 서진을 저지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한 중재자적 역할 담당 가능성 증대
 - 대(對)중국 디커플링 전략 지속을 통해 무역 및 핵심 기술 분야 내 대중

국 의존성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인도·아세안 등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건설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다양화 촉진

- 인도태평양 내 기존의 경제 전략적 접근방식 및 역할 강조를 넘어, 한국·일본·미국·호주 등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유럽의 역내 군사·전략적 역할 확대 추구

□ 유럽통합의 위기 지속 및 보수우파 정권 연쇄 탄생 가능성 증대

- 극우 민족주의 세력의 약진 지속 및 유럽의 보수 우경화 가시화
 - 극우 세력의 인기 가도로 인해 유럽통합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증대됨과 동시에, 그로 인한 서(西)발칸반도 국가 및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에 관한 논란 및 갈등이 재 점화될 공산 존재
 - 독일·프랑스를 위시한 주요국 내 불법 이민자 및 난민에 의한 테러 공격 가능성이 증대됨과 동시에,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 악화 및 강경한 이민·난민 통제 정책지지 여론 증대 유력
 - 내년 독일 총선 혹은 조기 총선 실시 시 기독교민주연합(CDU)·기독교사회연합(CSU) 중심의 보수우파 정권 출범 가능성이 농후하나, 대서양 동맹 중시를 골자로 하는 대외안보 기조는 불변
 - 절대적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마크롱 정부의 불안정성은 악화될 공산이 크며, 2027년 국민연합(RN)의 대선 승리를 저지하기 위한 바르니에 내각의 보수 우경화 정책 추진 가능성 증대

□ 정책 시사점 및 고려사항

- 유럽·미국·NATO 간 전략적 협력 강화와 한·미·일 공조 체계 발전
 - 유럽 대륙이 보유한 막대한 지정학적 이익으로 인해 미국의 나토 탈퇴 및 급속한 역할 축소 가능성이 저조하며, 단기적으로 미국의 역내 역할을 대체할 유럽 국가 및 유럽의 자체적인 역량 부재
 - 독일의 미국 전술핵 확대 재배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의 유사시 핵안보

대비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한미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일본·대만 등과의 안보·전략적 협력 확대 필요

- 파병을 제외한 우리의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지속함으로써, 러시아·북한의 군사적 활동을 견제함과 동시에, 한반도 및 대만 유사시 유럽 국가의 전 방위적 군사 원조 제공 유도

○ 유럽의 인도태평양 내 군사 안보 활동 확대와 한·나토 협력 강화

- 유럽의 군사·전략적 역할 강화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직간접적으로 억제하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한국과 유럽 나토 국가 간 군사협력 구체화 촉진
- 다만 유럽의 공동 방산 전략을 통한 자체적인 대량 무기 조달 역량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대(對)유럽 방산 수출에 유의미한 영향 제공 가능성 존재
- 유럽의 대(對)중국 디커플링 전략에 협조하여 우리를 포함한 범(汎)서방 진영의 대중국 의존도 감소 및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촉진 유도 필요
- 유럽의 인도태평양 내 군사 전략적 역할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한·미·일 공조 체계와 연계 및 활용함으로써, 중국·북한의 군사적 위협 저지와 대만 해협 정세 안정화 뒷받침 필요

2024년 안보 정세 평가 및 2025년 전망

III. 2024년 안보 정세 평가 및 2025년 전망

1. 국제 안보환경 및 한반도 주변 정세

1) 2024년 평가

□ 미중 전략경쟁 기초 하 협력 모색

- 군사·경제·첨단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 양국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 중
이나, 미중 경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주력
 - 대만 문제, 수입 관세, 반도체, 사이버 위협 등 주요 현안에 있어 양국 간
확연한 입장차 재확인
 -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사태의 격화로 인하여 글로벌 안보 환경의 불안
정성이 극대화된바,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적 대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
쟁의 수위 조절
- 전략경쟁 외중에도 양국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에서는 공조하며 상호
협력 가능성 확인
 -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차단된 양국
간 군사대화 채널이 복원 중
 - 인공지능(AI)과 마약류 등 미중 양국이 빈번히 갈등을 빚어온 현안에 대
해 소통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 의지 표력
- 다만,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향후 세계 안보 및 인도태평양지역 안보 정
세의 불확실성 심화
 - 트럼프의 독특한 개인적 성향을 바탕으로 러-우크라이나전, 이스라엘-

헤즈볼라전은 추후 복잡하게 전개될 여지

- 인도태평양지역 차원에서는 미중간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 대만 해협, 남중국해 문제와 더불어 공급망 등 경제안보에 있어 불안정성 가중
- 한반도 차원에서는 북핵 비핵화, 확장억제,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문제 등 한미동맹의 현안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

□ 글로벌 진영화 심화

- 미국을 필두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이에 대항하는 중리의 연대가 지속
 -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양분된 미·유럽과 중리의 대립 구도가 중동 사태를 겪으며 더욱 고착화
 - 중리는 중동 사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며 親이스라엘 기조의 서방 진영 국가들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 공유
- 글로벌 사우스 진영 국가들의 영향력 확대에 의한 글로벌 진영화의 다극화 추세 뚜렷
 -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증대된 경제적·외교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특정 진영에 편입되지 않고,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실용적 외교 정책을 추구
 - 국제질서의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미국과 현상 변경을 원하는 중리 모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협력과 지지가 필요한 국제 정세로 인해 독립된 진영으로서의 존재감 과시

□ 동북아 역내 대립 구도 심화

-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하여 역내 한미일 vs. 러북 간 대립의 구도가 더욱 공고화
 -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

- 그러나 이번 파병으로 인하여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욱 거세진바, 중러북 삼각 연대에는 긴장 유발
- 최근 중국이 한일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나, 역내 긴장 해소에는 역부족인 수준
- 한일중 협력 강화를 시도하는 배경에는 미중 전략경쟁에서의 리스크 관리, 특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중국의 의도 내재
- 그러나 아직 협력 단계가 초기 수준인바, 한일중 협력이 역내 이미 고착된 신냉전 구도를 완화하는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은 미미

□ 북한의 2국가론 등 적대 정책노선과 저항도 도발의 지속

- 북한은 남북이 서로 별개의 독립된 국가라는 ‘2국가론’을 내세우며, 대남 적대 정책 노선을 분명화
-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인 독립국가’로 규정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과의 통일보다 북한 체제의 유지와 발전이 더 중요함을 강조
-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 도로 및 철도를 폭파하는 등 남북 간 통로를 차단하며 남과 북이 물리적으로도 단절된 국가임을 강조
- 북한의 대남 도발은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전통적 도발 이외에도 오물풍선 살포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 등장
- 미사일 발사의 경우 다양한 미사일의 위협 능력을 과시하는 무더기 발사는 비교적 줄어들고, 신무기 개발을 위한 시험발사 위주
- 남한 내 북한 인권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각종 오물을 풍선에 담아 날려 보내며 남북 간 긴장 유발

2) 2025년 전망

□ 美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트럼프즘(Trumpism)”의 확산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층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를 대외정책의 핵심 기초

로 차용, 글로벌 차원의 파급효과로 이어질 것

- 거래적 관점에서 대외관계를 추진함으로써 탈냉전 이후 미 행정부가 보여온 자유주의적 가치 중심의 동맹·외교정책과의 결별을 선언
- 유럽 NATO 회원국을 비롯한 기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미국의 일방적 안전보장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경제적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 젊은 총성과 인물들을 2기 내각 외교안보 요직에 기용하여 대외적으로 트럼프즘의 강력한 이행 의지를 표명
- 관세를 활용한 보호 무역주의의 확산과 세계화 및 자유무역 담론의 쇠퇴 예상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존 무역협정 재협상과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경제를 보호하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중국과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가속화하며 미국의 첨단 기술 및 제조업 부흥과 경상수지 흑자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무역정책 강화 예상
 - ※ 트럼프 당선인은 2기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25% 관세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을 발표, 마약(펜타닐)과 이민자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내세움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 공언)

□ 권위주의 국가 간 연대(Authoritarian Convergence)의 강화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속에서 러북 군사협력이 심화되고 중동에서는 중국-이란의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 지속
 - 러시아와 북한은 상호 군사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하고 푸틴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 교두보 마련,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핵심 군사기술 이전을 기대할 것
 - 트럼프의 러-우전쟁 조기 종전 공약의 이행 방식과 휴전 조건의 내용에 따른 정세 변화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

- 중동에서는 이란, 중국, 러시아의 연계가 강화되며 에너지 시장 확보와 군사협력 및 경제적 교류를 통한 연대의 강화 전망
-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간 분쟁 여파로 지역 불안정 지속
 -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 협상이 승인되었으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여파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서방과의 협력 및 아랍 국가들의 노선을 둘러싼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및 러시아의 중동지역 내 전략적 연계가 강화될 유인을 제공
 - ※ 트럼프 2기의 대중동 정책이 1기 행정부의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과 같은 중동 세력균형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

□ 미중전략경쟁 격화로 인태지역 안보 및 경제 불안정성 증가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와 강력한 대중국 견제 군사전략의 가시화 예상
 - 러우전쟁 및 중동 분쟁의 안정화 이후 미국의 제한된 전략자산을 대중국 견제를 위해 인태지역에 집중할 가능성 존재
 -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증가로 미중간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의 긴장 고조가 역내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것이나, 동맹국들과의 안보협력 강화 유인도 존재
 - ※ 트럼프 2기 핵심 외교안보 직위에 대중 강경파인 마이크 월츠 하원의원(국가안보 보좌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국무장관)을 지명
-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 가속화로 인한 역내 공급망 불안 심화
 - 중국과 경제적인 교류가 필수적인 인태지역 국가들은 미중 경제 디커플링 과정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 높음
 - 미국의 동맹국들은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협력해 나갈 가능성이 높으나,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IPEF)과 같은 방식이 아닌 소다자 형식의 협력구도가 유력

□ 러북밀착과 미북협상 가능성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리스크 가중

- 러북 군사협력의 심화와 이어지는 핵심기술 이전 가능성 및 북한의 군사력 강화 추이가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높일 것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에 북한군 파병의 대가로 첨단무기 기술과 자원을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짐(ICBM 재진입 기술, 핵/WMD 핵심기술 등의 고도화)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강화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심각한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트럼프와 김정은의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과 불완전한 핵군축 협상에 대한 우려 지속
 - 트럼프 대통령의 정사간 담판을 통한 관계개선에 대한 선호로 인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이 재추진 될 가능성이 높음
 - ※ 트럼프 1기에서 대북협상을 주도했던 알렉스 웡(Alex Wong)을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임명하여 미북협상 추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신호를 보낼 경우 동맹국인 한국에게는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인식, 강력한 자체핵무장 여론 표출 및 주변국으로의 핵 도미노로 이어질 우려 상존

2. 국제 군사안보 정세

1) 2024년 평가

□ 미중 전략경쟁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 상존

-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배치
 - 2024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세 나라는 인태지역의 안보 위협에 공동대응 방안 논의
 - 미국 의회 국방전략위원회는 중국의 군비 확충에 맞서 오커스(AUKUS)

- 와 쿼드(QUAD) 등 소다자안보협의체의 역할 강화와 국가간 협력 강조
- 인태지역에서 중국 견제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주일미군 통제 기능 강화를 통해 미군 역할의 재조정 추진
-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접근을 차단하고 핵심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공세적인 군사력 강화 정책 추진
 -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이 2024년 핵탄두를 200여 기에서 500여 기로 늘렸다고 추정했으며, 미국방부도 2035년까지 중국이 1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
 - ‘근해 방어’에 중점을 두었던 중국 해군은 ‘원해 방위’라는 개념으로 전환 러시아와의 합동훈련 강화 및 베링해/지중해까지 훈련 범위를 확대
 - ※ 중국 해군은 2030년대 중반이면 각종 함정 500척을 보유, 수량은 물론 질적으로도 미 해군 전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 미국과 격차가 큰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부분에서도 H20 모델과 096형 핵잠수함 등의 개발을 통해 전력 강화
- 2024년 초 미중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해상군사안보협의체(MMCA, Military Maritime Consultative Agreement) 등 주요 군사 대화 채널을 2년 3개월 만에 복원
 - 제18차 미중 국방부 차관급 실무 회담에서는 입장차 해결보다는 대만과 남중국해 등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 초점을 두고 논의
 - 9월 17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서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군을 공격한 사건 이후 미국과 필리핀은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모색
 - 그러나 서필리핀해에서 미국은 호주, 일본 등의 동맹국들과 해군 합동훈련을 실시하면서 미중간의 군사적 긴장감은 지속

□ 러-우 전쟁 지속과 함께 글로벌 휴전 분위기 확산

- 러-우 전쟁은 개전 이후 2년이 넘으면서 전선의 큰 변화가 없이 고착화

되는 모습

-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과 도네츠크 등 동남부 지역에서 치열하게 교전을 지속하면서 양측 모두 상당한 손실
- 우크라이나는 지난 8월 쿠르스크 지역을 급습하여 러시아 본토를 개전 이후 최초로 점령 흑시 모를 휴전 협상에 대비하여 전과 확대
- 최근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공격 드론 등을 사용하여 러시아 본토 깊숙이 있는 공항, 탄약고, 군사 지휘부 등 주요 핵심 시설 타격
-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의 공격을 허용하면서 러-우 전쟁은 점차 그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
- 미국은 80억 달러 이상의 군사지원을 약속했고, 9월 26일 자국산 장거리 지대지미사일 ATACMS의 러시아 본토 공격도 허용
 - ※ 11월 19일 우크라이나군은 ATACMS 6발로 러시아 브란스크 군사 시설(제1046무기고)을 공격
 - ※ 러시아는 3차 대전을 경고하면서 핵교리를 개정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무기 사용 위협
- 프랑스는 현재까지 26억 유로의 군사지원을 했으며, 독일도 지난 9월 우크라이나와 11억 유로 규모의 군사지원 패키지를 약속하고 최근 AI 유도 드론 4천 대를 우크라이나에 공급
- G7이 지난 6월 500억 달러 규모의 대출 지원에 합의한 후 최근 영국은 군사 및 인프라 회복을 위해 약 2.94억 달러의 대출 지원을 발표하면서 스톰 새도우 미사일 등을 포함한 무기 조달을 우선 추진 계획
-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의지와 반대로 유럽 국가들 내부에서 휴전협상 분위기가 점차 확대
- 트럼프 재선과 최근 북한군 참전으로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전황이 돌아가기 전에 휴전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 확산
- 미국이 지원을 중단할 경우 유럽 국가들의 지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우크라이나가 점령당한 영토를 회복해 승리한다는 가능성 불확실

- 얼마 전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우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한국전쟁 휴전 방식이 거론, 그러나 영토의 20%를 빼앗긴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 증가와 함께 전쟁 확대 가능성 고조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헤즈볼라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이스라엘-이란 간 갈등도 증폭
 -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의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이후 하마스는 5천700여 개에 달하는 땅굴에 의지하여 이스라엘 공격을 방어
 - 헤즈볼라는 무선호출기 동시다발 폭발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 선언,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향해 ‘북쪽의 화살’ 군사작전 개시 → 11월 26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휴전안에 대해 승인함으로써 교전 중단
 - 이스라엘은 7월에 하마스 수장 이스마엘 하니예(Ismail Haniyeh)를 이란서 암살한 후, 9월에는 공습을 통해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Hassan Nasr Allah) 제거
- 이스라엘은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배후로 의심되는 이란의 핵개발 위협에 대응하여 군사작전을 실행
 - 4월 이스라엘은 시리아내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타격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위 장성들을 살해하자 이에 이란은 300여 기의 드론과 순항 미사일로 보복(제1차 진실의 약속 작전)
 - 이스라엘이 나스랄라를 제거하자 ‘제2차 진실의 약속 작전’으로 180여 발의 탄도미사일로 보복 공격, 이스라엘도 테헤란 군사시설 타격
 -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습과정에서 이란의 일부 핵시설(탈간 2(Mahvareh-bar Talqan-2))을 파괴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란 핵무기 개발이 중동에 가져올 위협을 강조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확대와 이스라엘-이란 갈등 고조 과정에서 주요 강대국들 간 입장차로 인한 역할의 한계
 - 미국은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급진적 행보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에 대한 부정적 여론 증가로 인해 적극적 개입에 한계
 - 러시아는 러-우 전쟁에 집중하고 있고, 중국은 중동과의 경제 협력에 주력하는 관계로 국내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아 양국은 역할이 미비
 - 트럼프 재선과 함께 중동 정세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지만, 미국의 탈중동정책 기조와 중동 국가들의 외교 다변화 추진으로 중동 정세의 불안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북한의 러-우 전쟁 파병과 핵능력 고도화 달성 위협

- 김정은이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보고 남한을 ‘주적’으로 선언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 고조
 - 한국은 북한의 오물풍선, 탄도미사일, GPS 전파 교란 등 연이은 도발로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재개
 - 북한은 9.19 군사합의로 파괴된 휴전선 GP 등을 복구하고,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완전히 끊어 요새화 공사 진행
 - 최근 휴전선 부근 화력임무를 수행하는 8개 포병여단을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 무장시켜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면서 군사적 긴장감 고조
-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전망과 함께 핵능력 고도화 지속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
 - 북한은 연내 여러 차례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자행했고, 사거리 15,0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최신행 ICBM인 화성-19형 발사 성공
 - UN에서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종료되고, 한미일을 비롯한 11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이 출범

- ※ 11개 참가국은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트럼프 재선과 함께 김정은은 협상력 강화와 유리한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해 핵실험과 정상 각도 ICBM 시험발사를 감행할 가능성 상존
-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 수준의 군사협력 강화로 인해 한반도 안보 불안정 지속
 -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북한의 파병으로 군사동맹관계로 격상되었고, 중북관계는 어느 정도 갈등이 있었지만 중북수교 75주년을 기념하여 시진핑과 김정은이 축전을 교환하는 등 관계 지속
 - 북한은 러시아와의 조약을 근거로 러·우전쟁에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한반도 안보에 위협 요인 제공
 - 러북 동맹조약 체결과 러-우 전쟁 파병 등 러북 초밀착 행보를 통해 중국을 자극하고, 적어도 러시아 수준의 대북 지원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2) 2025년 전망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군사적 긴장의 지속 내지는 심화

- 대만해협에서의 미중 간 영향력 확보 경쟁 심화 전망
 - 대만 주변에서 중국 군사훈련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미국이 항공모함 등 군사력 배치로 대응할 경우 긴장이 발생할 위험성
 - ※ 인도-태평양은 우크라이나, 중동과 달리 미국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잠재적 충돌 가능성이 어느 지역보다 큰 것으로 평가
 - 대만이 트럼프 정부의 안보 무임승차 비판을 피하기 위해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중국의 강한 대응 예상
 - ※ 미국의 ‘대만관계법’을 근거하여 군사지원을 받는 대만은 2024년 10월 말, 20억 달러(약 2조 8천억 원) 규모의 무기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

공방 강화를 위해 추가 무기 구입 가능성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또한 쉽게 해결될 여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미 중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중국에 가장 적극적으로 맞서는 필리핀에 무인수상정(USV) 등 무기를 지원하고 비밀 군사정보를 교환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정보수집·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 양국은 대규모 합동훈련을 통해 중국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아왔으며, 필리핀군은 군사정보 일반보안에 협약함으로써 미국의 위성과 드론을 활용한 정찰 시스템에 접근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간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분쟁 지역 공동 개발을 제안하며, 역내 국가들의 대중국 공동 대응을 견제

□ 러-우전쟁의 조기 종식 Vs 확전 상황의 병존

- 북한의 대러 파병 및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 등 다른 국가들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심화하면서 러-우전쟁의 확전 가능성 배제 불가
 - 단기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트럼프의 다짐과는 반대로, 전쟁에 개입하는 행위자들의 증가로, 소모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확전 위기 고조
 - ※ 전쟁의 지속은 유럽의 안보 질서를 흔들고, 에너지 및 식량 가격 상승 등 글로벌 경제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러시아가 새로운 핵독트린 공개 및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공세의 수위를 높이면서 차기 트럼프 정부의 전쟁 조기 종식 기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배제 불가
-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이후 러-우간 평화 협상 진전 여부에 주목 필요
 -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권한과 요구사항이 축소된 평화협정에 젤린스키가 합의하도록 할 가능성 소지
 - 미국이 현 전선 상황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유

- 예한다면, 우크라이나는 휴전 협상을 거부하고, 소모전을 선호할 가능성
-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트럼프의 신속한 협상을 통한 전쟁 조기 종식안에 찬성하는 유럽 국가들이 늘어날 경우, 러시아에 유리한 평화협정 체결 우려

□ 중동지역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의 지속

- 네타냐후 대통령은 親이스라엘 성향인 트럼프의 재당선을 기회로 삼아, 2025년에는 보다 공격적인 중동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가 2기 행정부 첫 이스라엘 대사로 친이스라엘 성향의 마이크 허커비를 지명하면서, 바이든-해리스가 목표로 했던 △이란 핵합의 복원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역내 인권 및 동맹 강화 요원
 - 사실상 미국의 중재 역할이 사라지면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견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역시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
- 단, 강경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트럼프의 고립주의적 성향은 이스라엘의 강경행위를 제어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
 - 지난 10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네타냐후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하자 헤즈볼라와의 휴전 합의에 임하게 된 것으로 추정
 - 트럼프의 고립주의적 반전 성향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꺼리거나 중국 등 다른 위협 대응을 우선시하도록 만들어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제한할 가능성 배제 불가
-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휴전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불씨는 잔존
 - 이스라엘의 휴전 이유는 △이란의 위협에 초점 △이스라엘군의 재충전과 보강 △전선을 단절시켜 가자지구에 하마스를 고립시키는 것
 - 즉, 이미 기선을 제압한 헤즈볼라보다는 이란과 하마스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어 전선을 변화함으로써 하마스전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기에는 난망

□ 러북 군사협력에 따른 한반도 안보 긴장 고조

- 러시아의 군사 기술지원에 따른 북한 핵능력 고도화의 위험성 증대
 - 파병 대가로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특수 소재 및 부품 개발에 있어 향상된 기술을 도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핵무기 생산의 자립도를 높일 가능성
 - 극초음속미사일, 정찰위성, 원자력추진잠수함 및 기타 신형 플랫폼 개발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기술적 진보를 달성할 가능성
 - ※ 기타 △핵탄두 소형화 △핵무기 생산 시설 현대화 △핵무기 관리 및 통제 분야에 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 불가
- 북한은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개발하여 기술력을 과시하고 해상 도발을 통해 한미일 연합방위태세를 시험할 것으로 전망
 - 5개년계획의 마지막 해인만큼, 과업 완료를 위해 5대 전략무기와 무인기, 정찰위성 시험을 자주 실행할 것으로 예상
 - ※ ‘제2함선공업혁명’을 주장한 바,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잠수함 개발에 집중할 것이며 엔진 및 신호 탐지, 통신 체계 개발 관련 러시아의 기술 지원 예상
 -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해상 사격 등 해상에서의 도발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NLL에 대한 영유권 주장 강화 가능성

□ 강대국간 핵·재래식 군비경쟁 심화

- 미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한 군비 증액이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경쟁국인 중국·러시아의 군 현대화도 계속되면서 강대국간 군비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 2024년 전년 대비 국방예산을 3.2% 증가한 미국은 내년도 예산도 1% 이상 증액하였으며, 대선 레이스 당시부터 트럼프는 국방비의 대폭 증액을 예고한 상황
 - ※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첫해에만 국방비를 10% 증액한 바 있으며, 트럼프는 군사비 증액을 통해 군사력 재건뿐만 아니라 군수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는

것으로 판단

- 2027년까지 세계 일류 군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중국은 첨단무기 개발과 정보화 전쟁 수행 능력 강화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 군사 기지를 확보하며 해외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
 - ※ 중국은 거의 30년간 끊임없이 군비를 증강하고 있으며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전체 군사지출의 절반을 차지
- 러시아는 미국과의 군사력 균형 달성을 목표로, △새로운 핵무기 시스템 개발 △사이버전, 특수부대 등 비대칭 전력 강화 △중국, 이란 등과의 협력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진영화 및 지역 분쟁의 해소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2025년에도 군비 지출의 전례 없는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동에서 큰 폭의 군비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
 - ※ 2024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러-우전쟁에 연루된 NATO의 군비지출이 급증
 - 각기 저마다의 이유로 군비경쟁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점점 더 불안정한 지정학적·안보 상황에서 행동-반응 악순환에 빠질 위험
 - ※ 멕시코 등 중앙아프리카 지역은 일부 국가들이 범죄조직을 통제하기 위해 군대를 활용하면서 군사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남미의 범죄 수준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2025년에도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AI 기반 군사기술 개발 경쟁 심화

- AI 기반 무기체계들이 지역분쟁을 테스트베드(test bed)로 삼아 활용되는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
 - 우크라이나는 병력 규모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살상용 자율비행 드론의 생산과 전장 투입을 늘릴 것으로 예상
 - ※ 우크라이나는 'GIS 아르타'라고 하는 AI를 활용한 전술 프로그램을 이미 사용 중이며 AI를 도입한 살상용 드론의 정확도가 80%까지 올라가며 효율을 입증하면서

전장 투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

- 우크라이나의 전자전에 대응하여 CRPA(Control Radiation Pattern Antenna)와 자폭 드론을 활용 중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AI 기반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함에 따라 기술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벌일 것으로 예상
- AI 무기개발 경쟁 심화로 인해 완전 자율무기체계 개발이 가속화되고 동시에 살상 결정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더욱 강조될 전망
- 현재는 AI 무기 중 개발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전투기이나, AI 군집 드론, 킬러 로봇 등의 개발과 실전 도입이 예고되고 있으며, AI를 통한 지휘프로그램 또한 개발 단계
 - ※ 중국은 AI를 이용한 대규모 워게임을 진행하였으며, 이스라엘은 제거 대상의 데이터를 입력받아 위치정보를 역추적하는 AI 프로그램 합소라(Habsora)를 공개하여 미래 군사작전 수행방식에 대변혁을 예고
- AI 판단 오류 및 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살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제법 위반 여부와 윤리적 논쟁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 AI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 AI 군비 통제를 위한 국제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2024년 신안보 정세 평가 및 2025년 전망



IV. 2024년 신안보 정세 평가 및 2025년 전망

1. 경제안보

1) 2024년 평가

□ 미·중 갈등 속 경제안보 디리스팅 전략 추진

- 미중 갈등과 지정학 리스크 심화로 인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 각국은 '경제가 곧 안보'라는 인식 아래 경쟁력 제고와 회복력, 가치 중심 공급망 다변화·내재화 등 위기 상황에 대한 안정적 대응 방안 마련에 초점

※ IMF는 10.23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보호주의 정책의 강화는 글로벌 무역을 악화시키고 성장을 촉진한 혁신과 기술이전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제한해 중기적으로 세계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진단

- 대중 의존도 탈피와 중국의 공급과잉 대응 차원에서 미국, EU 등은 전기차 등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 및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규제, 중국은 기술자립,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출통제 등으로 맞대응

※ EU는 10.29 불공정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 공급자들이 유럽 전기차 생산업체에 피해를 주는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

□ 첨단·핵심 기술의 안보 자산화 경향

- 주요국들은 기술패권 경쟁이 지속되면서 자국의 핵심 산업 보호를 위한 법·제도 등 다양한 정책 마련·시행

- 미국, EU 등은 첨단반도체·양자컴퓨팅·인공지능(AI) 등 첨단·핵심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확대 및 대중 투자 제한, 외국인의 투자 심사 강화, 핵심기술 연구에 대한 보안 강화
 - ※ 정부 연구비 지원 대학·연구소에 대한 외국자금 지원 여부 감시 및 연구 보안 강화
- 중국 또한 미국 등 서구에 맞서 반도체·2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출을 허가제로 강화하고 국가안보 위협 외국기업·외국인 제제를 위한 수출통제법도 시행

□ 기술탈취 수법 고도화로 핵심 안보자산에 대한 위협 가중

- 첨단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퇴직자나 정년을 앞둔 타국의 해당분야 인재를 대상으로 파격적 조건으로 적극 영입
- 첨단기술 보유 기업 대상으로 사이버 해킹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한편, 업무제휴나 기술협력 또는 투자를 명분으로 접근하여 기술 탈취
- 대상국내 기업을 설립하거나 제3국에 설립한 위장기업에 전문직 출신을 고용하여 기술을 유출시키는 수법도 사용
 - ※ 중국 최대 SUV차량 판매사가 지난 1월 한국 내 대학에 위장연구소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삼성SDI·SK온 전·현직 직원들을 영입하여 기술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
- 국내의 경우 최근 5년(2020~2024.8)간 산업기밀 해외유출 단속 건수가 111건으로 피해액도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첨단기업·인재 확보와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전략 구사

- 자국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파격적인 보조금을 내세워 관련 기업 유치를 견인
 - ※ 미국은 반도체 과학법(칩스법) 등 시행을 통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금공제 혜택 제공하고 일본·EU 등도 반도체 생산 공장 유치를 위해 다양한 보조금 정책 시행

- AI·반도체 분야 전문 인력 영입을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간소화로 세계 인재들의 영입을 도모
 - 바이든 행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모으기 위해 국립과학재단(NSF) 등에 8,000억 달러를 배정, 미국 내 관련 연구자들을 지원
 - 중국은 과감한 연구비와 다양한 혜택을 내세운 천인계획 등을 시행하며 세계 각국의 인적 자원을 흡수
- 또한 강대국들은 보조금 등 특혜 제공과 무역장벽을 무기로 자국 내 투자와 기업 유치를 압박하는 등 강은 양면 전략 구사

2) 2025년 전망

□ 미중 패권경쟁 심화와 무역전쟁 확산 우려

- 트럼프 재집권과 미국 우선주의 2.0으로 1기보다 대중 견제 강화, 경제안보 중시와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관세와 규제를 수단으로 미중 패권경쟁과 무역 전쟁이 심화될 전망
- 각국이 통상을 수단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와 감시활동 강화로 무역 분쟁이 빈발하면서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도모
-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우방국 이외에도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 확보 노력 경주 필요

□ 트럼프 2기, 무역보호주의 심화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

-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자국 이익을 염두에 둔 주변국에 과도한 관세 부과 제조업 부활 추진 및 화석연료 사용 확대 등이 철강 및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주력산업에 미칠 리스크 증대
-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가동해 미국과 글로벌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핵심 기술의 공급망과 조기경보 시스템을 보강
-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기회요인을 발굴하고 위협요인에 대해 선제 대응

하는 등 무역전쟁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해 주력

□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진입장벽 고도화와 기술 유출 수법 진화 우려

-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컴퓨팅, 바이오 등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위한 기술 보호주의 경향이 심화하면서 후발주자들의 관련 산업에 대한 육성 및 추격 기회 상실
- 정상적인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첨단기술 이전이 제한됨에 따라 첨단기술 및 공급망 확보를 위한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접근 시도 역시 빈번해질 가능성
- 기술 탈취를 위한 해킹이나 관련분야 인재 유인 등 고전적 방식 이외에도 기업 인수·합병,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통한 기술 확보 등 수법 고도화 우려
- 국가 첨단·핵심기술 유출 관련 법규를 정비, 중요 기술에 대한 보다 확실한 보호 대책 강화
- 해외의 기술 유출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정부, 관련 전문가, 첨단기업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의 경제안보 거버넌스 구축

2. 신기술·AI

1. 2024년 평가

□ ‘EU AI Act’, ‘미국 AI 국가안보각서’ 등 글로벌 차원의 AI 규제 본격화

- 인공지능 규제를 세계 최초로 법제화한 ‘EU AI Act’가 발효됨에 따라 (‘24. 6) 글로벌 AI 규범 확산 논의 활성화
 - 해당 법안은 AI의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AI 단계를 구분하였으며 사회적 파급력에 기반한 차등 규제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용성을 고려
 - ※ 특히, ‘슈퍼선거의 해’로 불렸던 2024년에는 AI 기반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허위정보들이 여론 조작과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위험의 심각성이 표출됨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역시 10월 24일 ‘인공지능 국가안보각서(National

Security Memorandum on AI)’을 발표, 지난해 공표한 AI안전 행정명령(’23. 11)에 대한 세부 이행 지침 제시

- 국가안보를 위한 AI 활용과 민주적 가치 보호, 핵심 이행·관리 주체인 ‘AI 안전연구소(’23. 12 설립)’의 임무와 권한에 상당히 많은 내용 할애한 혁신과 규제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발표

□ 군사 분야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논의 활성화

-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2024) 개최를 통해 국제 평화와 분쟁,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들에 대해 집중 논의
 - ※ 러-우 전쟁에서 시가 무인용 드론과 정보심리·인지전에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사용에 대한 규제 필요성 제기
- AI 관리 의무 적용 범위 측면에서 군사용 AI는 인도주의적, 법적, 안보적, 기술·사회적, 윤리적으로 다양한 위험과 연계됨을 확인
- 이러한 AI 위험은 반드시 사전에 식별·평가·관리되어야 하며, 통제와 활용 기회가 특정국이나 소수 집단에만 향유되는 것이 아닌, 보편적 원칙으로 기능해야 함을 명시
- 무기화 전 단계의 개발 주기에 걸쳐 책임 있는 방식의 적용과 유엔 헌장 및 국제인도법 준수와도 궤를 같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AI 반도체 기술 주권 이슈의 부상 및 미·중 경쟁 심화

- AI 반도체는 AI 연산 능력에 최적화된 반도체 기술 품목이자, 생성형, 범용 AI의 활용 분야 확대에 따라 첨단 AI 반도체 확보 문제가 대두
- 특히, 고성능 AI 반도체 설계와 제조공정을 특정 기업이 독점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견제하기 ‘반도체 기술 주권론’ 부상
 - ※ AI 반도체 표준을 엔비디아가, 제조공정을 TSMC가 독점함으로써 이를 견제하기 위한 Google, Amazon, Tesla, Apple들은 자체플랫폼에 최적화된 칩 확보 노력

강화

- 공급망 가치사슬 내 첨단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위상 또한 격상
 - 특정 AI 반도체에 활용될 목적으로 호환성을 중시하고 맞춤형으로 소량 생산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제조 수율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
- AI 반도체에서의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에 맞서 중국 역시 새로운 공급처와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결 심화 예상
 - 특히 미국은 AI, 초미세 공정 단위뿐만 아니라 7나노 이상의 범용 반도체 분야 또한 중국과의 거래 금지를 국내외 기업에 통보, 이미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2) 2025년 전망

□ ‘트럼프 2기’의 출범에 따른 글로벌 기술협력 구도 변화 전망

- 향후 집권할 美 트럼프 2기의 미중 전략경쟁은 경제 담론이 지정학이나 기술안보 담론을 압도할 전망
 - 바이든 행정부가 전개해왔던 핵심 전략기술을 매개로 동맹 및 우호국과 다자 및 소다자 파트너십 기반의 대중 견제 방식은 퇴색 예상
 - ※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및 우호국과 ‘우방 쇼어링(ally&friendly-shoring)’, ‘신뢰 기반 가치사슬(trusted value chain)’을 통해 중국을 배제한 대체 공급망 구상을 전개
 - 트럼프 2기는 전략기술 자체를 안보의 목표로 삼지 않고 경제적 압박과 거래의 수단으로 인식(AFPI Agenda 2025)
- ‘바이든표 정책 지우기’ 가속화에 따른 국제 기술협력 품목의 변화 전망
 - IRA, 반도체 과학법 등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주요 친환경 · 과학투자 법안을 폐기하거나 축소 전망
 - 과학기술정책 역시 경제 인플레이션과 대외 의존도 완화에 중점을 두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분야는 제약 예상

-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강조되어왔고, 현재도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신기술 부문에서의 협력 공간이 열릴 가능성
 - 우주기술, AI, 양자과학기술 등을 중심으로 동맹 및 우호국들과의 파트너십 공간을 열어줄 가능성에 대비, 기술·인력·표준 차원의 협력 수요 예상
 - 특히, 미국 내 대테러 역량 강화 및 중요 인프라 보호 측면에서 사이버보안 협력 파트너십이 강화될 가능성

□ 민간 중심 자율규제 따른 글로벌 AI 규범 질서의 불확실성 전망

- 2025년에는 현재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간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 AI)’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전망으로 생성형 AI가 촉발한 충격 이상의 파괴적 혁신이 나타날 가능성
 - ※ Open AI의 수장 샘 올트먼은 생성형 AI를 넘어설 진화된 형태의 새로운 AGI의 출현 시기를 2025년이라 언급
- 현재와 같이 빅테크를 위주로 AI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과 규범을 선도하고 있는 EU 간의 균형 질서가 깨질 수도 있음을 시사
 -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미국 신정부가 AI를 비롯한 신기술 전반의 규제 완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암시
 -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하는 ‘정부효율부(DOGE)’의 창설에서 보듯이, 트럼프 2기는 AI 분야의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할 것이며, 이는 국내 파급력에 그치지 않을 전망
- 결과적으로 진흥과 규제 권력을 모두 거머쥔 미국식 AI 패권 질서가 펼쳐질 가능성에 대비, 우리의 AI 정책 방향 역시 이 같은 기초를 예의주시할 필요
 - 지나친 AI 규제를 지양하고 향후 대미 AI 표준 논의, 파트너십 구축에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함을 시사

3. 사이버안보

1) 2024년 평가

□ 사이버안보 전략의 구체화

- 우리나라와 미국은 사이버 분야 전략 문서 혹은 그 실행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고, 유럽은 공급망 보안 강화 관련 법제 채택
 - 우리 정부는 2024년 2월 1일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였고, 그 후속 조치로 9월 1일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
 -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24년 5월 7일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이행계획 버전 2(National Cybersecurity Implementation Plan: Version 2)’를 발표
 -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는 2024년 10월 10일 ‘사이버 회복력법(Cyber Resilience Act)’을 채택
- 러시아와 북한은 2024년 6월 러시아와 북한이 소위 ‘러·북 신조약(러북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면서 사이버공간에서도 밀착
 - 동 조약을 통해 볼 때, 러시아와 북한은 사이버공간에서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 적극 협력할 가능성 다대
 - 동 조약에서 러·북은 △인터넷 정보통신망 관리를 위한 국가들의 평등권 주장, 주권 침해 반대, 인터넷망의 주권 보장, △ IT 이용 및 범죄 등에 대한 경고, 적발, 차단, 조사용 정보교환 등 범죄 목적의 IT 이용 반대 및 해당 분야협력, △허위정보와 도발적 정보활동에 공동 대처, △이를 위한 언론분야 협력 강화 등을 협력 분야에 포함

□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딥페이크 확산

- 2024년은 지구촌 선거의 해를 맞이하여 각종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및 딥페이크가 문제가 되었고,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국내 정책 전환
 - 국내에서도 소위 서울대 딥페이크 음란물 사건을 계기로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

- 기존 획일적 업무망 분리 정책으로 공공데이터 공유와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에 곤란함이 발생하여 다층보안체계(MLS)로 전환

2) 2025년 전망

□ ‘힘에 의한 평화 복귀’의 사이버공간 실행에 대비

- 트럼프가 집권함에 따라 ‘힘에 의한 평화 복귀’ 전략 추진으로 공세적 사이버 작전이나 적극적 사이버 방어 정책이 강화될 전망
 - 미국은 트럼프 1기에서 추진했던 ‘공세적 사이버 작전(Offensive Cyber Operation)’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
 - 비국가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사이버 처벌(cyber punishment)’과 공세적 사이버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 증대
 - 사이버공간 안전성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의 힘에 의한 사이버 평화 전개에 참여
- 트럼프 집권에 따라 ‘힘에 의한 평화 복귀’를 내세우면서 특정 국가 및 국가 그룹들과 양자 사이버 관계 강화와 규범 정립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
 - 한미동맹에 따른 사이버안보 훈련과 공세적 사이버 작전이 더욱 빈번하게 실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관련된 비용 부담을 우리에게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 다대

□ 러북 사이버 밀착에 따른 대응 활동 강화

- 러북 신조약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이 사이버공간에서의 밀착도 확대·강화될 것으로 예상
 - 트럼프의 집권으로 암호 화폐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북한의 암호 화폐에 대한 공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러시아와 북한의 사이버 밀착에 대한 미국과 서방 및 우리나라의 견제와 대응을 위한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 상당

- ‘선제적 방어(Defense Forward)’, ‘헌트 포워드(Hunt Forward)’ 등의 작전을 통해 이러한 국가 배후 해커들에 대한 체포 및 기소 등의 실질적 대응 수행
- 미국과 서방 및 우리나라 사이버안보 관련 기관들의 비난과 경고, 사이버 경제제재, 합동 훈련 등이 강화될 전망
- 러북의 사이버 밀착을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들 기반으로 암호 화폐 해킹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을 주도

□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딥페이크 대응 강화

-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적 신뢰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됨에 따라 주요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전망
 - 미국은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개정하여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딥페이크 유통에 따른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치할 것으로 예상
 - 유럽연합은 디지털서비스법(DSA) 집행 강화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딥페이크 등의 게시 방지와 신고 확대를 독려할 것으로 전망
 - 우리도 가짜뉴스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따른 민법상 배상 책임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는 등 해당 논의가 확대될 전망
-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국내 법 정비를 추진하고 이에 기초하여 국제규범 창출에 적극 참여
 - 다층 인증체계, 제로 트러스트, 공급망 보안 관련 사이버안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기술 표준 활동에 적극 참여

□ 사이버안보 역량을 위한 국내외 기술 정책 강화

- 국내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정책의 구체적 실행 기대

-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등의 실행을 기반으로 다층보안체계(MLS)가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보안기준, 단계별 로드맵 등이 발표될 전망
- 미국은 방위산업 분야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5년부터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
- 공급업체의 고위 관리가 해당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매년 확인할 필요
- 공급업체들은 이러한 확인을 정확하게 하도록 대상 시스템을 정비하고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수립할 필요

4. 우주안보

1) 2024년 평가

□ 우주 공간의 신냉전 구도 부상

- 중국과 러시아는 지상발사 레이저 무기와 위성 요격미사일, 이동 능력을 갖춘 위성 등을 실전 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러시아는 핵무기 탑재 위성 발사시험도 실시한 것으로 추정
- 미국은 ‘책임 있는 대(對)우주 캠페인’을 통해 미국의 위성 네트워크를 공격에서 보호하고 필요시 궤도 위의 적 우주선을 지상이나 우주에서 방해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차세대 수단을 확보 중
- 우주에서의 군비경쟁을 막기 위한 미국 주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4월 24일(현지시간)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며, 우주 공간에 대한 규범 경쟁도 심화

□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구축 경쟁

- 미국과 중국은 자체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저궤도 위성 발사 속도를 가속

화하고 있으며, 비표준 독자 규격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 경쟁을 심화 중

- 스페이스X, 원웹, 아마존, 텔레셋 등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과 중국 국유기업인 상하이 ‘위안신위성과학기술공사(SSST)’의 ‘천범성좌(千帆星座)’ 프로젝트, 중국 기업 스타넷 등이 상호 경쟁

□ 한국의 우주 개발 약진 속 북한은 우주 역량 한계 확인

- 우리나라는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강국 G7 진입’에 성공
 - 우주항공청 개청 그리고 제도적 차원에서 국가정보원 소관 ‘우주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급변하는 우주 안보 환경에 선제 대응하며 우주 개발 및 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
- 북한은 2023년 전원회의 당시 ‘정찰위성 3개 추가 발사’를 계획하고, 지난 5월 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했지만 1단 추진체 엔진의 미작동으로 실패

2) 2025년 전망

□ 우주 공간의 진영화 가속화

- 미국은 전략적으로 통합억제력 확보를 위해 우주력 강화를 지속할 것이며, 중국은 군에 사이버 방어, 우주 분야 등 전략적 역량의 종합적 강화를 주문하고 있어 우주 공간의 안보 경쟁 심화
 - 미국은 우주 개발 차원에서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우주 기업이 주도하는 달 및 화성 탐사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중국도 ‘국가 우주과학 중장기 발전 계획(2024~2050)’을 기반으로 2050년까지 세계 일류 우주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어 미중 우주 개발 경쟁도 심화 가능

□ 러북 우주 협력으로 북한 우주 위협 가능성 확대

-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을 당시 북한군 파병 대응으로 러시아로부터 우주 기술 지원을 약속받았을 가능성 다대
- 2024년 10월 북한이 시험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은 기존 미사일의 개량형이 아닌 신형으로 추정되고 있어 러시아 기술 지원 의혹이 있으며, 향후 양국의 위성 협력 시 북한의 우주 위협 가능성 확대
- 한국의 우주 역량 확대에 따라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의 우리 우주 자산에 대한 물리적 위협(우주 파편 등)과 비물리적 위협(사이버 공격 등) 등의 복합 안보 위협 가능성 증대

□ 한국의 체계적인 우주 안보 역량 강화와 북한 정찰위성 발사 대응

- 우리의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제4차 한국형 발사체 발사, 민간 발사장 확충과 국방 발사장 구축 방안, 우주 부품 국산화와 첨단 항공 엔진 등 민군 기술협력 분야를 발굴 등을 기획 및 추진
- 트럼프 2.0 시대 미국과 우주 안보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확대 강화하고, 아르테미스 협정에 적극적인 참여 및 우주 위협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한국의 우주 역량 강화
- 북한이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준비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미 그리고 한미일 공조를 기반으로 북한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을 정밀 추적 감시 및 대응 체계 마련

5. 바이오·보건안보

1) 2024년 평가

□ 신종 변이 감염병의 등장으로 보건안보 위협 급증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속적 변이와 재확산

- 코로나19의 위기가 대유행에서 풍토병으로 위험수위가 격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오미크론 하위변종들은(피롤라 → JN.1 → 플러트 등) 계속해서 진화해왔으며 24년 여름부터는 KP.3종이 우세종으로 등극, 세계적으로 재유행
- 변이로 인한 전례 없는 감염병 위협 증첩과 이로 인한 다중 팬데믹 위험성 발생
 - 코로나19 재유행과 더불어 기후변화 등 급속한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결핵, 말라리아, 백일해와 같은 다양한 감염병들이 동시에 재등장하며 여러 감염병이 동시 발발하는 ‘멀티 데믹’(multi-demic)의 위험성 대두
 - ※ 두 개의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현상은 ‘트윈데믹(Twindemic)’, 또는 세 개 이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트리플데믹(Triplicatedemic)’이라는 신조어 등장
 - 미국에서는 트리플데믹(코로나19+독감+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이 발발한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다중 팬데믹 발발이 계속 관찰되며 이에 대한 피해가 확산
- 원숭이두창(Mpox)
 - 2024년 8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클레이드 Ib’ 변종이 등장하여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에 대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
 - 유전자 분석에 따르면 이 변종은 변이를 거치며 인간의 면역력을 회피하는 기능을 얻으면서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 가능
 - 2024년 9월 30일 기준 올 한해 총 13명의 엠폭스 환자가 국내에서 발병했고 22년부터 누적 168명이 발생하는 등 위험 고조
- 신종 조류독감
 - 가금류 사이에서만 유행하던 A(H5N1)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최근 미국에서 변이가 발생하며 가금류를 넘어 포유류(젓소)에까지 중간 전파 관찰
 - 미국에서 감염된 포유류(젓소)에 직접 접촉한 농민(인간)이 감염된 사례

가 보고되고 있으며 24년 11월 기준으로 46명의 사람이 A(H5N1)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조류 → 포유류 → 인간으로 중간 전이가 발생

□ 첨단 바이오 및 생명공학 영역의 안보화 움직임 가속화

- 바이오경제의 부상과 차세대 산업혁신과 경제적 부가가치에 주목
 - 미국을 필두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첨단 바이오 기술을 차세대 유망산업 혁신을 위한 원동력으로 주목하며, 자국의 핵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
 - 주요 선진국들(미국, 영국, 일본, EU)에서 차세대 먹거리와 순환 경제 실현의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경제’ 채택 및 국가전략서 발행
- 첨단 융합기술의 등장과 국가안보 영역의 확장
 - 첨단 바이오/생명공학 분야가 반도체 및 AI와 같은 첨단 ICT 기술과 융합하여 기존의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견인하며 새로운 디지털-바이오 시대의 개막을 예고
 - 디지털-바이오 시대를 맞아 개인 유전정보와 생체데이터에 대한 보안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미국은 타국이 불법적으로 미국인의 생체데이터 수집을 방지하기 위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발의

2) 2025년 전망

□ 다중 팬데믹 발발 가능성과 신종 변이 출현의 위험 고조

- 겨울철 독감, 폐렴 등과 같이 코로나19와 비슷한 호흡기 감염병 질환이 동시에 발발할 경우, 초기 진단상 혼란과 더불어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통합대응 능력제고 필요
- 엠폭스의 경우 만약 추가적인 변이가 진행되어 종간의 전파를 넘어 사람 간 전이(사람 ↔ 사람)될 경우, 전례 없는 대유행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엠폭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

- 다수의 보건 전문가들은 신종 조류독감(H5N1) 바이러스의 추가적인 변이로 인해 <인간 ↔ 인간>의 전파가 가능해진다면 다음 대유행(넥스트 팬데믹) 발생은 시간문제임을 경고

※ 코로나19 사망률(1%) 대비, 이번 변이 조류독감은 최소 25%, 최대 50%의 사망률 예측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글로벌 제약회사들에서 개발한 A(H5N1) 백신을 선제적으로 비축 중
- 코로나19처럼 변이가 쉬운 조류독감(RNA 바이러스)의 특성상 다양한 변종 출현에 조기 대응할 수 있는 mRNA 백신 플랫폼 개발에 집중 돌입

□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의 미중 갈등 불씨 점화

- 美 의회에서 계류 중인 『생물보안법』(Biosecure Act)과 『위험연구검토법』(Risky Research Review Act)의 실제 입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첨단 바이오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미-중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 급증
-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방 쇼어링’ 전략을 폐기하고 미국 내 바이오 제조/공정 및 연구개발의 자급화를 위한 ‘리쇼어링’ 전략으로 전환, 동맹국·우호국들의 생명공학 기업과 산업생태계 변화 촉발
- 첨단 바이오 산업계의 글로벌 공급망 사슬이 재편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반사이익을 극대화하며 예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 탐색이 절실히 필요

□ 다자주의 기반 글로벌 보건·바이오 레짐의 후퇴

-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다자주의의 회의론적 입장과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 참여 철회를 시도한 바 있었으며, 2기 행정부에서도 WHO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철회·감소를 결심할 가능성 다대
- 트럼프 1기 때 탈퇴하였던 INF 협약과 마찬가지로 논리(상대방 국가를 완벽한 검증할 수 없고, 특정 국가들이 의도적으로 협약을 준수하지 않

- 을 수 있다는 이유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서도 탈퇴 가능성 잠재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산업 패러다임을 화석연료 사용으로 회귀시키며, ‘화이트 바이오(재생가능 미생물 또는 효소 이용 친환경 바이오연료 개발)’ 산업에 대한 R&D 투자 급감 및 관련 분야 글로벌 ESG 기업들의 경제적 타격 불가피

6. 테러

1) 2024년 평가

□ 국제 테러단체, 역외 대형테러로 존재감 과시

- 한동안 이슬람 수니파 테러단체인 알카에다·ISIS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테러 활동으로 최근 세력이 크게 위축, 중동·북아프리카·서남아 정 불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위협 세력으로 전락한 것으로 평가
- 하지만, 2023.10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이후 예멘 ‘후티반군’, 이라크 내 親이란 민병대, 레바논 ‘헤즈볼라’ 등 시아파 무장정파들이 반서방 무장투쟁을 주도하며 이슬람권내 입지를 강화하는 것에 대응
- 2024년 1월 이란 「슬레이마니」 4주기 추모식장 자폭테러(1.3, 104명 사망), 튀르키예 이스탄불 성당 총기 난사(1.28, 1명 사망),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 총기 난사 및 방화(3.22, 145명 사망)를 자행하는 등 역외 테러를 재개
- 이슬람권 내 반이스라엘 정서 확산에 편승, 인터넷 선전매체와 SNS를 통해 다양한 테러 수법까지 제시하며 올림픽 경기장과 유대 시설 등 대상 외로운 늑대형 자생테러를 선동하며 존재감을 과시

□ 아프리카 사헬지역, 역내 분쟁 격화와 테러단체 세력 확장으로 혼란 지속

- 사헬지역에서는 쿠데타(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내전(수단), 종족 갈등 (에티오피아), 다양한 무장단체 준동(나이지리아) 등에 따른 정치적

혼란 지속과 무력 충돌 격화로 대규모 사상자와 피난민 발생

- 역내 치안 공백 상황을 틈타, 보코하람·JNIM·ISIS-사헬지부·알샤바브 등 극단주의 테러단체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세력 확장을 시도, 테러 정세가 극도로 악화

□ 국제 주요 물류 공급망 안전, 테러단체의 위협에 노출

- 예멘 후티 반군은 “하마스 지지와 서방권에 이스라엘 대상 가자지구 전쟁 중단 압박” 명분 아래 홍해-수에즈운하 항로를 이용하는 각국 선박들을 드론, 미사일 및 자폭용 드론 보트로 공격
- 각국 선박들은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홍해(전 세계 교역량의 약 12%, 매년 평균 약 17,000척 이용) 대신 아프리카 남부 희망봉으로 운송경로를 변경(운송거리 약 6,300km, 연료비는 약 100만 달러 추가 소요)

□ ‘파리 올림픽’ 계기, 프랑스 철도·통신망 물리적 공격으로 일시 마비

- 보안당국의 다양한 치안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림픽(7.26~8.11) 직전 프랑스 각지에서 파리로 연결되는 ‘테제베’ 노선망 신호박스과 케이블 운반 파이프에 동시다발적인 방화 사건이 발생(7.26, 주체 불분명), 열차 운행이 중단되며 약 80만 명의 승객 이동에 차질 발생
- 또한, 올림픽 경기가 진행 중이던 7.29 우아즈·오드 등 프랑스 6개 지역에서 SFR, 부이그 등 통신사 배선반 광섬유 케이블이 고의로 절단되는 사건도 발생, 유·무선 통신 장애 발생

□ 세계 각지에서 극우·극좌 및 환경단체에 의한 외로운 늑대형 테러 빈발

- 전 세계 곳곳에서 정치 양극화에 따른 각국 사회 내부 분열과 SNS를 통한 혐오·선동 등에 영향 받은 극단성향 인물들에 의한 정치인 암살 시도·폭행과 세계문화유산, 다국적 기업 대상 물리적 폭력도 빈발
- 2024.5월 슬로바키아 「피초」 총리 피격, 6월 유럽의회 선거 직전 독일 정

치인 피습(2건), 7월 「트럼프」 美 대선 후보 총기 피격사건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월 여야 정치인이 각각 흉기로 공격당하는 사건 발생

- 또한, 과격한 환경단체들은 화석연료 퇴출, 기후 위기 경고 등 명분으로 2024.3 독일 베를린 테슬라 공장 인근 송전탑 방화, 6월 영국 스톤헨지 거석에 물감 분사, 8월 축구 스타 「메시」의 스페인 내 별장 외벽에 페인트 낙서 등 자행

2) 2025년 전망

□ 중동전쟁 장기화와 사상자 급증 영향, 역내 테러 정세 불안 지속

-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하마스·헤즈볼라 주요 지도자와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도 사망(2024.11월 기준 약 4만 5천 명), 이슬람권 전반에 반이스라엘 여론 팽배
- 하마스·헤즈볼라 내 강경파는 지도부의 휴전 협상 추진에 반발, 이스라엘과 전쟁 지속을 주장하며 이슬라믹 지하드 등 극단주의 조직에 합류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결성한 후 자살 폭탄테러 등으로 보복 우려
- 또한, 이라크 내 친이란 시아파 무장단체들도 팔레스타인 지지를 명분으로 이스라엘을 타겟으로 한 드론·미사일 공격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예멘 후티 반군도 팔레스타인 지지 명분으로 홍해-수에즈운하 항로를 운항하는 이스라엘행 선박 대상 공격 가능성 잠재

□ 국제 테러단체, 반이스라엘 정서 확산 편승 세력 확장 및 자생테러 선동 강화

- 알카에다·ISIS는 이스라엘-하마스·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을 계기로 반이스라엘 반서방 정서가 확산 중인 점을 이용, 이슬람권 단결과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전략을 구사

- 하마스·헤즈볼라 내 강경파, 무력 충돌 희생자 가족, 이스라엘 정착촌 확장으로 생활 터전에서 쫓겨난 팔레스타인 주민 등을 조직원으로 모집하며 분쟁지역을 중심으로 조직 재건과 세력 확장을 기도
- 서방권 내 추종자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딥페이크,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보안당국 탐지 회피, 동조자 모집, 테러 수법 등을 교육하며 극단주의 선전과 자생테러 선동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 각국 내 극우 극단주의 확산, 인종 혐오성 테러 기승 우려

- 유럽·북미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난민 유입 반대, 유대인 혐오, 백인 우월주의 등 극우 극단주의 정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지 선거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이 큰 폭으로 약진
- 주요국의 극우 바람에 편승, 극우 극단주의자들이 이민자·유대인·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욕설·폭행·방화 등 혐오범죄를 자행할 가능성 농후
- 또한, 난민 수용거부 및 불법 이민자 단속·체포·추방에 반발한 이민자 커뮤니티 내 일부 불만자들이 테러를 선동하거나, 혐오범죄를 자행하는 극우 폭력적 극단주의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잠재

□ 관계기관 합동, 중동정세 변화 동향 면밀 모니터링 및 파급영향 점검

- 관계기관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중동 정세변화 동향을 면밀 점검, 체류 국민 안전 확보 방안과 원유·가스 수급, 산업 공급망 등 경제적 파급 대책을 적시성 있게 마련 필요
- 내전, 테러단체 활동, 치안 불안 국가들의 정세변화 동향과 서구권 내 폭력적 극단주의 사건 발생 동향을 면밀 분석,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 수시 게재하며 신변안전 유의를 권고하는 등 재외국민이나 해외여행객 보호 강화

- 중동사태 관련 국내 反이스라엘 집회의 폭력시위화를 예의 주시하는 한편, 이슬람권 출신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지원을 빙자한 테러 자금 모금 여부도 관찰
- 또한, 경주에서 개최될 ‘제32차 APEC 정상회의’(2025.10)에 대비하기 위해 행사장(컨벤션센터, 호텔 등) 주변뿐만 아니라 경주 시내로 연결되는 교통망, 전력망, 통신망, 수도망 등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
 - ‘No to APEC’과 같은 다국적 단체들의 反APEC 시위도 예상되는 만큼 과격 시위에 대비한 안전 대책도 세밀하게 수립 필요

7. 국제범죄

1) 2024년 평가

□ 국제정세에 편승한 사이버범죄의 지역적 집중과 피해 증가

-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초기부터 수반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은 2024년에도 국제정세를 적극 반영, 올해 선거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범죄 등과 결합된 하이브리드위협으로 진화
- 사이버범죄 피해는 주로 북미·유럽에 집중된 반면, 해킹·피싱 등 범죄 조직은 주로 동남아 및 아프리카 등지에 소재했다는 점이 사이버범죄 발생의 지역적 편차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 국제 해킹·피싱조직의 거점지역이 신속한 형사사법공조가 어려운 정쟁불안 또는 치안부재 지역에 집중된 점은 국제정세가 국제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력 시사, 국내에도 유사한 파급효과 발생 여부에 향후 주목 필요

□ 신기술 기반 범죄수단의 활용과 더욱 정교해진 수법의 진화

- 사이버범죄의 주요 수단인 랜섬웨어 및 멀웨어는 국내외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주로 겨냥, 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사이버보안수준이 비교적 낮다는 점에서 범죄조직의 손쉬운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임

- 사이버위협이 다른 분야와 동일하게 사이버범죄 역시 빠르게 발전하는 신 기술을 범죄수단에 적극 활용, 암호화된 채팅앱·다크웹 및 가상자산의 범죄적 활용 외 생성형 AI를 새로운 피싱 수단 개발에 악용 증가
- 해킹 등을 통해 일차적으로 탈취한 개인정보를 생성형 AI에 접목한 ‘딥보이스 피싱’, 집배원·택배기사를 위장한 원격제어 앱을 통한 피싱 등 범행 수법이 더욱 정교해진 반면, 피싱 탐지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편

□ 국제 마약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한국의 신종 마약시장 부상

- 마약류별 기존 시장 안정과 신규 시장 개척 등 마약시장의 성장세 및 마약류 오남용 인구의 저연령화 가속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나 항정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은 약물 종류별 뚜렷한 지역적 편차 지속
- 국내는 그동안 필로폰을 주로 유통해왔으나 △마약사범의 저연령화 △의료용 마약류(항정 포함) 오남용 급증에 따라 마약의 국내 공급·유통시장이 빠르게 확대, 가격은 하락하는 등 잠재적 오남용 인구 유인 요인도 확대
- 필로폰 등 국내 유통 합성마약의 주원산지인 동남아 신종 합성마약시장은 압수된 메스암페타민의 최다 기록 및 케타민의 적발량 증가와 함께 클럽용 신종 마약이 연이어 등장, 마약의 질적 향상·양적 증가에 주목 필요
- 2023년 감소했던 아프간 내 양귀비 재배가 2024년에는 다시 증가세, 아프간 내 양귀비 주요 재배지의 타지키스탄과 중국 접경지역 이동은 향후 중앙아시아 루트를 통한 안정적인 헤로인 공급·유통 지속 예상
- 비교적 높은 안정세를 유지 중인 유럽 마약시장은 러-우 전쟁의 여파로 인한 △기존 유통경로 변화 △합성마약 제조 거점이동이 신규 시장 개척으로 연결되는 한편 합법적 물류공급망을 통한 마약 유통량 증가 시도

2) 2025년 전망

□ 사이버범죄의 지역적 편차 지속 및 신기술의 범죄적 악용 증가 예상

- 범죄수익의 극대화화 해킹·피싱조직의 사법망 회피를 고려 시 조직의 소재지와 주된 피해 발생지역의 불일치는 장기간 지속될 전망
- 미국 등 주요 피해국가와 공동대응책 수립 및 해킹·피싱조직의 주요 소재지가 위치한 국가와 효율적인 공조 방안 모색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전망
- 유튜브·틱톡 등 개인 소셜미디어의 이용 증가로 해킹·피싱조직이 절취 가능한 개인정보도 음성·영상까지 확대, 시나리오 기반 피해자 기망 방식보다 AI를 이용한 신원위조·피해자 기망의 덤보이스 피싱 증가 예상
- 일반 사회보다 범죄조직의 신기술 적용이 더욱 빠르다는 점에서 AI 외 암호화된 채팅앱·다크웹·가상자산의 범죄적 악용은 증대 예상, 전통적 사이버범죄 외 他국제범죄 유형과 결합된 넥서스 등장 여부에 주의 필요

□ 국제 마약시장의 전 세계적인 성장과 국제정세 파급영향에 주목 필요

-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국제마약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한편, △러-우 전쟁 군부 △쿠데타로 인한 정쟁 불안 및 통치자금 마련 등 국제정세가 마약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 추세 지속 예상
- 아프간 내 양귀비 재배의 재증가 및 재배지역 이동은 국제 아편시장의 안정적 공급·유통이 예상되는 부분, 중앙아시아 루트를 통한 아프간산 아편류 유입 가능성에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한국은 △마약류 공급·유통시장 확대 △마약류 가격대 하락 등 요인으로 신흥 마약시장으로 점차 부상하고 있는바, 기존 필로폰·향정 중심 국내 유통시장의 변화 가능성에 지속적인 관찰과 주목 필요
- 국내 마약사범의 연령 및 국적 등에 따라 오남용 마약류가 상이하고, 마약사범의 저연령화 현상은 국내 마약시장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지적, 단속 중심 現정책에 예방적 접근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

8. 기후변화

1) 2024년 평가

□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로 복합위기 심화

- 지난해 이어 엘니뇨와 라니냐 발생으로 전 세계 기상이변이 빈번하면서 기록적인 폭염·폭우·산불 등 초유의 기후재난이 발생했고 그 여파로 작황 부진으로 식량 위기와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 등 복합위기 심화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열대화 시대가 시작됐다”고 표현

- 개발도상국과 기후 취약국뿐만 아니라 한국 포함 선진국에서도 최악의 기후재난 발생으로 손실과 피해가 속출하였으며, 북한은 기후재난 대응의 취약성과 한계로 커다란 재난 발생
- 가뭄 및 폭염 등 이상기후로 농작물(코코아, 커피, 올리브유 등), 광물 자원과 같은 글로벌 주요 원자재의 공급 불안정과 가격 변동성 심화로 전 세계 기후플레이션 야기
- 기후변화 대응이 인권 차원에서도 중요해지면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부실을 인권 침해(스위스)로 판결했고, 미국에서는 ‘노동자 보호’와 같은 극단기후로 인한 예방적인 관리에 주력

□ 플라스틱협약 도입 등 성과 불구하고 갈 길 먼 기후 위기 대응

- ‘플라스틱협약’ 최종협상, 국제 탄소시장 기반 마련으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와 기후 위기 대응에 새로운 전환점 마련
-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도하는 ‘플라스틱협약’ 최종협상(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175개국이 동의
-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11.11~22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국제 탄소 배출권 시장 관련 세부 지침에 합의함으로써 국제

탄소시장 기반 마련으로 연간 50억 톤의 탄소 배출량 감축 전망

- 글로벌 정세 불안정과 진영화, 경제 성장세 둔화 등은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기후재정 확충 등 국제협력에 장애물로 작용
 - 전 세계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정보를 담은 ‘기후공시’ 표준화와 의무화 작업은 미국 금융 규제 당국의 반대로 대폭 후퇴했고, 인공지능(AI) 붐으로 디지털 전력 수요가 늘면서 오히려 탄소 역주행
 - 미중 갈등으로 COP29의 주요 초점이었던 2025년 이후 ‘신규 기후 재원 목표’(NCQG) 논의가 교착되면서 기후변화 취약국들의 기후 대응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불투명

2) 2025년 전망

□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불확실성 증대 우려

- 2025년에도 이상기후가 빈번하면서 식량, 원자재 등 다양한 기후 리스크와 기후플레이션이 예상되나 기후위기를 사기로 인식하는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은 후퇴 우려
-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유럽 내에서도 환경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극우 정당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후 리더로서 EU의 리더십 약화로 탄소 저감 노력 약화 우려

□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3.0) 달성을 위한 탄소 배출권 거래 활용

- 2025년 초에 각국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3.0)를 유엔에 제출(2025.2 시한)해야 하지만, 탄소 감축목표 달성이 불확실하며 전 세계 배출량 역시 여전히 증가할 전망
 -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상향된 NDC’를 유엔에 제출했는데 글로벌 동향과 국내 여건을 감안해 ‘2035년까지 국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내외 감축 수단을 적극 활용 필요

- 국제 탄소시장에서 2030년까지 연간 2,500억 달러의 배출권이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감축량의 11.5%(3,750만 톤)를 국외에서 감축 계획
- 경제-에너지-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해 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기업의 배출권 운용 지원을 위한 지원 규모 확대

□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에너지 전환 지속 추진

- 10년 내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합의(COP28)에 따라 2025년에도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추진될 것이나, 전력 수요 증가 등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과도기적 에너지로 주목받을 전망
- 인공지능(AI) 산업의 디지털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소형모듈 원자로(SMR) 등 AI 가동을 위한 자체 전력망 확보 노력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청정에너지 투자 촉진 가능성

□ 이상기후 일상화 등 새로운 유형의 기후 리스크에 대비 필요

- 기후재난 대비 ‘조기 경보 시스템’ 가동과 긴급 정보 신속 전송 등 초기 대응 매뉴얼 재점검으로 피해 최소화, ‘기후플레이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원자재 비축물량과 비축 기간 확대, 순환경제 활성화
- 기후환경비서관실이 과학기술수석실로 이관된 만큼 기후·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과학기술 기반으로 접근해 녹색 전환과 청정산업을 동시 추구, ‘기후변화 대응지수’를 높일 필요
-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존 에너지 공급망 확보는 물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한 주요 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미국 등 LNG 수입선 다각화와 기존 수입선의 공급 여력 점검

□ 과도기 에너지원으로서 원전 활성화 대비와 녹색 외교 강화

-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디지털 전력 수요 확대로 원전의 중요성 지속 전망

- SMR은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수출 주력 상품인 만큼 기술과 시공·운용 능력까지 갖춘 한국의 경쟁력과 경험을 부각할 필요
- ‘녹색 사다리’ 등 자발적 공여 확대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
 - 기후 취약국의 기후변화를 관리를 위해 연간 최소 1조 달러(2030년까지 6조 달러)가 필요하므로 녹색기후기금(GCF) 등 각종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기금에 ‘자발적’ 공여를 통해 그린 리더십 제고
- 한반도 초국경 기후 위기 대응에 남북 협력 기회 모색
 - 북한은 반복적인 기후재난에 물적·인적 피해가 지속하고 있고 초국경 감염병 등 한반도 기후 위기에 공동 대응 필요
 - 기후위기 대응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미북 대화 재개 대비 인도적 차원에서 협력 방안 마련

2024년 정세 평가 및 2025년 전망

인쇄일 2024년 12월 17일

발행일 2024년 12월 17일

발행처 사단법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행인 한석희

주 소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 빌딩

전 화 02-6191-1000 Fax 02-6191-1111

홈페이지 <http://www.inss.re.kr>

인쇄처 한국학술정보(주)

ISBN 979-11-7318-126-9 (93060)

INSS

2024년 정세 평가 및
2025년 전망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 빌딩
Tel. 02-6191-1000 Fax. 02-6191-1111 www.inss.re.kr

비매품/무료

93060



9 791173 181269

ISBN 979-11-7318-126-9